第287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6號

國 會 事 務 處

2010年2月8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1. 경제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1. 경제에 관한 질문 ····· 1
o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 1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 4
o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호르스트 쾰러) 방청 ····· 25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 25

(10시29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오늘 여러분들 시계를 보시다시피 본회의 개의시간이 30분 늦었습니다. 국무위원들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의원총회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지만 의원총회보다도 국회 본회의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국빈이 우리 국회를 방문을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예방해서 국회의원님들과 국정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렸습니다마는 2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쾰러 독일 대통령께서 본회의를 참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2시 30분 본회의에 늦지 않도록 관심을 좀 보여 주시고 독일 대통령의 국회 참관에 우리도 또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32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의장 김형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입니다.

지난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행사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격려로 온갖 시련과 편견을 이겨내고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소중한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 탄압은 독재정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명박 정부의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을 먼저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 탄압은 독재 회귀의 어두운 망령이 부활했음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어둠을 틈타 경찰이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침탈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에 대해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고 연행하는 야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당정치, 민주정치가 무참히 유린된 현장이었습니다.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별건의 정황만을 가지고 원내정당에 대해 이토록 무차별적인 수사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이런 무리한 공권력 남용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말살시키려는 헌법 파괴의 저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반사회적 통치방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6·2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민주노동당을 흠집 내서 반MB선거연대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처음 불거졌던 불법해킹 의혹부터 밝혀야 합니다. 공당의 당원 명부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것인지부터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불법 해킹은 투표함을 탈취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며 공당 서버를 침탈한 것은 이를 만천하에 드러낸 폭거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것이 민주노동당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임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의 투표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 안팎으로 보장돼야 하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근간을 뒤흔들고 당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것이 기정사실화된다면 국민들의 정당 참여와 정치활동은 막대한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일련의 사건을 정치탄압이자 정당파괴 행위 나아가 인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3월 세종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을 조기 종식시켜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장기화시키며 대대적인 선전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권 내 논란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 포기를 선언하지도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면 세종시 원포인트 국회를 3월에 개최해 처리합시다.

세종시 수정안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논란을 키우고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도 지연시키는 민생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자주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지형은 6자회담 재개 및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환기의 남북관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즈음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정신을 재확인하고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민족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야 정당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함께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회 결의안을 4월 국회에서 채택해 남북관계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한나라당의 국회 선진화법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없애

고자 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청와대 선진화법이 먼저 필요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소수 재벌만을 위한 법을 만들며 청와대의 거수기, 꼭두각시로 전락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전쟁터처럼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폭력적인 권력 남용 때문입니다. 국회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지는 통법부의 신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으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교섭단체의 높은 진입장벽은 소수 정당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의 특권이자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국회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의 요건 완화는 이미 17대에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필요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바로 소수 정치세력의 참여와 합리적 국회 운영을 제도화하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입니다.

공천 개혁은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시금석입니다.

최근 정몽준 대표와 이강래 대표께서 제안한 투명한 공천제도의 도입은 한국정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는 제안입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핵심은 진성당원제에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개혁을 잘할 의지가 있다면 세 불리기, 줄 세우기 당원 모집이 아니라 진성당원제부터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진행해 온 상향식 공천제도, 여성 및 장애인 할당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소선거구제 회귀는 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환원 시도는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퇴행적 행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서 기존의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해 선거구를 늘린 당리당략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합니다.

위험천만한 국가재정, 부자감세·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위기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나라 빚 증가율은 2009년~2010년 17.7%로 OECD 평균의 11.6배에 달해 최고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위험천만하고 서민들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쓰고 싶은 만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코앞에 닥쳐온 이 시점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부담을 미래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서민물가 3적을 3대 상한제 입법으로 막아내고 민생 3고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무지개일자리 전략'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퇴출, 해고, 실업이라는 비참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서민생활에 검은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기조가 전환되지 않으면 결코 이 비를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 중심의 정책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검은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일곱 가지의 일자리 창출 대책, 고용·실업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기금에 국가재정 투입, 고용보험의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유지를 위해 대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고용안정세를 도입하고, 세 번째로 청년 의무고용제 도입을 위한 한국형 '로제타 플랜' 추진, 네 번째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 전면 도입, 다섯 번째로 공공 부문 일자리의 범주를 규정하고 이를 포함한 목표 고용률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실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 단축 방안 재구축, 일곱 번째로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서민물가 3적(敵)과의 전면전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 내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비,

전셋값, 공공요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교육비, 전셋값, 공공요금을 서민물가 3적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3대 상한제 입법으로 민생 3고를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물가를 낮추지 못하도록 상한을 유지·관리하는 거품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등록금 정책이 마찬가지며, 과중한 의료비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득권을 위한 거품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3대 상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부유층, 강남 집값의 거품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로 인해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등록금 인상액 상한제를 반드시 제도화하겠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을 양산하고 부자대학을 키우는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여전히 대학 운영의 75%를 대학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대학 운영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셋째,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병원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포함시키고 1인당 1년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유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2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 전인 작년 10월 노조 파괴를 위해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야당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연계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독재정권하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트위터와 모바일을 통해 4대강 공사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강행한 4대강 공사의 부실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간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대표, 각 정당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관 공동의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의원단 전원을 수계별 감시단장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역 시도당에 감시본부를 구성하여 일사분란한 현장 감시 체제를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반MB연대와 진보정치세력 통합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2일은 이명박 정권 2년의 폭정을 심판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야권연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득권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가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발판으로 야권연대를 견인하는 기관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고단한 서민이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출발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모범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잘 맞이하시고 고단함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화목하고 상생하는 명절이 되십시오.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0시52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선전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30개 OECD 회원국 중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았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생 경제 회복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먼저 정운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에 매년 신규 유입되는 인구 수가 40만 명 이상인 데 비해서 금년도 정부의 고용 목표는 20만 명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경제학자이신 총리께서 솔직한 현실 진단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5%의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경기후행성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때문에 금년에도 고용 사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고용 창출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취업자를 금년에 25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강길부 의원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을 보완해 나가야 하고 실업자 89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42만 명,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51만 명 등 총 182만 명에 달하는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금년에도 고용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만 민간부문의 경기회복과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가시화된다면 고용 사정은 어렵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출산이나 육아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심하고 게다가 재취업이 어렵다는 분석인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가사를 돌보면서 직장생활 유지에 적합한 단시간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재진입에 애로를 겪는 여성에 대해서는 이른바 맞춤형 재취업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또한 청년실업 문제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마다 5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 중 정규직 취업은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자질과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대학 졸업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대학의 인원과 학과를 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인력 수요에 비해서 과다한 편입니다. 교육의 내용 또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서 대학 입학정원, 학과 등을 조정하는 한편 산업 수요와 연계된 인력 양성 등 대학교육의 내용을, 또 방향을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 인력수급 전망 및 개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다음으로 세종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총리께서 직접 발표한 세종시 수정 발전안은 당초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 세종시의 도시 성격과 개발 방향을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국익을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세종시 원안대로라면 행정중심도시는 사실상의 수도 이전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9부 2처 2청 등 총 49개 기관이 이전하여 행정 각 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그 분야도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 아닙니까?

총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수도 분할 또는 수도 기능 해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된다면 세종시에 가게 되는 총리실 그리고 9부 2처 2청에는 대부분의 경제·사회 부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처들과, 다시 말해 서울에 남게 될 부처들과 경제·사회 부처들이 분리되면 정책의 감응성, 그다음에 또 적시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위기관리 능력과 국가경쟁력까지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강길부 의원 수도의 소재지는 한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수도의 위치는 국가안위와 국가방위전략에 관한 국방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는 통일 과정과 통일의 전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통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 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적 정통성,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상징성, 88 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의 기능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수도 기능을 분할하는 것은 정책관리,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통합 이미지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수도 분할, 수도 서울의 기능 해체는 전후 세대의 통일 의지를 약화시켜 분단의식을 고착화할 우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거대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중국의 북경과 일본 동경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수도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 이후의 수도의 입지입니다.

통일 수도는 접근성에 있어서 한반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토의 전 지역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울은 통일 한반도 측면에서는 중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남한만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이 통일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서울의 수도 기능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 개발과 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보기는 통일이 되면 필연적으로 수도 통합과 또 기능 분산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중앙부처를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KTX 역세권 개발 현황을 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고속철도 역세권에 대한 효율

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종합적으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예를 들어 울산 KTX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김천, 경주 등은 한국토지공사, 민간 투자자 등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울산은 사업 시행자가 유일하게 울산도시개발공사 단독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본금 700억 원의 지방 공기업 중 총 사업비 5092억 원의 개발사업을 담당하다 보니 역세권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3분의 1로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연계교통망 구축 등 주변 지역과의 상호 연계성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도심에서 KTX 역까지의 연결 도로는 국도 24호선의 신·구 양쪽 도로에서 분기하여 진입도로가 개설 중이지만 진입도로 1㎞ 이내의 구간에서 너덧 차례의 도로 굴절이 발생하는 데다 국도 24호선은 현재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여객과 물동량이 폭증하는 상태에서 대체우회도로의 신설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양산, 창녕, 밀양, 언양 쪽에서의 역세권 진입도로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은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개발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돼야 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역량과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내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일반적으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당초에 추진 주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강력히 지자체의 추진을 요구했기 때문에 울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서 차질 없이 되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고속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실무자로 하여금 체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홍수나 물 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 그리고 수질 개선, 생태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사업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치수사업입니다. 그렇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 지금까지의 하천 관리 사업은 복구 위주였습니다. 제방을 보강하고 쌓는 데 주력을 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후적인 제방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의 강바닥을 관리하자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준설토를 걷어내고 물길을 살리고 수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진작 했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아닙니까?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4대강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문제 대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먼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수계별 민원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상지원센터를 수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책반을, 합동대책반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공사 초기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일부 보상과 관련해서 다소 합의가 덜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둘째, 장관께서도 현장 확인을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하천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하부공사 등 홍수기 이전에 반드시 끝마쳐야 할 공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공정을 관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전체 공구에 대한 재난 관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구별 시공회사에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위기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과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대강 공사는 두 번의 홍수기를 거쳐야 되고 강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 관리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주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수 시나 이런 때 비상대책을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최근 낙동강의 달성보·함안보에서 나온 준설토에서 납,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그런 일부 색깔이 있는 흙이 출토가 돼서 국립환경과학원 등 3개 기관에서 2개 보에 대한 퇴적토를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금속 전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부에서 미국 해양대기청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 과정에서 오염된 준설토가 나올 경우에는 적절히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세종시에 관해서 충청도 출신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충청도 지역이 당초 안보다 경제적 손해가 되는지,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안 고수와 수정발전안,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저로서, 총리님께서 누차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또 나라의 먼 장래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발전방안을 확정시켜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현재 충청지역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여러 가지 단정적으로 여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마는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자영업주 26만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에 따라 무급가족 취업자도 6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가히 자영업의 붕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과당 경쟁과 대형화·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자영업의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용구조를 소위 임금 근로자가 비임금 근로자보다 많도록 그렇게 구조조정도 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기 위축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자영업주가 폐업을 하는 경우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비중이 무려 86.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는 사전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규제와 같이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한 두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 퇴출에 따라서 두 가지 대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영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

을 해 두면 나중에 폐업을 하게 되거나 퇴출이 되면 일반 임금 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퇴출 후에도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퇴출이 되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 전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직업훈련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정책 관계는 지금 소위 대형유통업체, SSM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SSM이 동네에 진입함으로 해서 동네의 영세한 슈퍼마켓 같은 곳의 상권이 침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재래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 같은 것의 발행을 권장을 하고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글로벌 시대에 WTO나 FTA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러한 중소유통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에 따라서 상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영업시간 제한 문제라든지 SSM이 이러한 전통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카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영세 사업주와 중소 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왔으나 정부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지금도 중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사적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는 협상력이 약한 소형 가맹점이 불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제도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수수료가 인하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상에 약한 소형 가맹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 시장을 예의 주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카드 수수료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다음으로 금융산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금융업은 금융산업으로 육성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기관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우리가 산업화 개발연대에 금융이 실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발전해 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찍이 80년대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의 자율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금융이 선진국의 금융에 비해서는 낙후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산업은 경쟁력의 핵심이 고급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예산 지원액이 보전이 됐고요. 앞으로 서울과 부산에 금융중심으로, 서울의 여의도, 부산의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현재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 내용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에 그치고 있고 또 자산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해외 주요 은행들은 50% 이상을 해외에서 시현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해외 부문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형 기업 인수합병 시장 등 해외의 많은 금융시장을 유럽이나 미국계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금융수출 방법으로 소매금융에 집중할 것과 아시아 지역에 우선 진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해외시장을 공격해야 하는데 우리의 금융산업을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는 제도 정비도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강 의원님 제안에 동의를 표합니다. 다른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우리의 국내시장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금융산업도 해외에 진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해외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단위 규모가 되어야 한다든지 핵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또 자본의 적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구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시장과 함께 이러한 요건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금융위기 이후 재편되는 국제 금융 구도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잘 대응만 한다면 대한민국도 뉴욕, 런던 등과 같은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70년대에 저희가 중화학공업을 시작할 때 오늘날 이 정도의, 우리가 성공하리라는 큰 기대를 갖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 수출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전자,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이러한 것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지금 하고 있는 속도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제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해 간다면 세계시장에서 금융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산업으로 탈바꿈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강길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영통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성공 시대'를 약속하며 집권한 지 2년, 우리는 지금 '국민 불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도, 국민 지갑도 텅텅 비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국가 부채가 108조 원이나 늘어서 올해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섭니다. 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빚만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거덜 날 지경입니다.

이명박 정권, 참으로 무능한 정권입니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빚더미 정권입니다. 대운하 토목공사에만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삽질 정권입니다. 10년, 20년 후 먹고살아 갈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역주행 정권입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가는데 재벌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강부자'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천금보다 더 무거워야 할 대통령의 언행이 풍선보다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스무 번이나 다짐했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아랫목에 불을 지핀다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윗목에 전기장판이라도 깐 다음 중소기업 위주로 구들장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합니다.

나라 밖의 상황도 지뢰밭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글로벌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피그스(PIGS)가 어떤 나라를 말하고, 왜 이런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다소 짓궂은 언론 용어입니다만 포르투갈, 이태리 또는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위기에 빠진 것은 과도한 재정적자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재정 부도라 그럴까, 국가재정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곳간은 텅 비어 가는데 무리하게 나라 빚을 늘린 것이 원인이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백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7% 성장한다는 전제로 1년에 60만 개씩 5년 동안 한 300만 개 만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실제로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기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 보시고 답변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악화됐고 고용도 악화됐지만 첫해에는 14만 개 늘렸고 둘째 해인 작년에는 오히려 7만 개가 줄었습니다.

○김진표 의원 화면을 더 띄워 주십시오.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일자리가 7만 개가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공공 부문에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가 19만 2000개가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26만 3000개나 감소한 겁니다.

정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청년실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자조 섞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정치적 수사만 번드르르한 속빈 강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우선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지원도 부족합니다. 공공 부문 역할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없는 대책입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금년 일자리 예산을 작년 추경 대비 24%나 깎았습니다. 규모로도 저 표에 있듯이 80만 개에서 58만 개로 22만 개나 줄였습니다.

정 총리께 묻겠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어떻게 일자리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뒷받침도 없이 저절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대책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추경예산과 금년 예산 비교하면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도의 본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2.6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늘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야 할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나 기업 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우리 경제 스스로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예산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업에서 만들어지는데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47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고, 아까 보신 26만여 명의 대부분의 실업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표3에 보면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때에 중소기업 분야 예산을 작년 추경 대비 5조 7000억, 27.4%나 깎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전액 삭감했지요, 긴급경영안정자금 80%나 깎았습니다.

정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대기업 프렌들리인 것으로 들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

감하는 것 이게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작년에 중소기업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추경 예산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의 관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고용 악화는 우리 경제 자체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고용 급락은 적어도 차단했다고 생각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용 악화 정도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표 의원 예.

또 한 가지, 일자리는 토목공사보다는 보육·교육·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가 가장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더라도 일시적 일자리에 불과한 토목공사에 너무 돈을 많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취업유발계수, 토목공사 특히 강바닥 토목공사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뭐 20명 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진표 의원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24개 일자리가 나오는데 토목공사는 16개입니다. 강바닥에 사람만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기계 하나에 사람 하나, 강바닥 토목공사는 그것에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OECD 절반 수준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 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본 의원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대운하 토목공사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장 세탁해 놓은 돈, 재벌에 땅 퍼 주기 특혜를 주기 위한 돈 모두 일자리 창출에 돌려야 합니다.

예산을 더 늘리는 추경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예산 배분을 바로잡는 경정도 추경 아닙니까?

정 총리께 묻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일자리 추경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는 대운하계획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세종시 관련 원형지 매각과 관련해서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김진표 의원 짧게 추경 문제에 관한 의견만 결론적으로……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의원 그런데요, 아까 들었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일자리가 시급하니까 4조 3000억만 일자리 예산을 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는데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8900억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두 달도 못 가서 일자리 사태가 벌어지니까 추경을 들고 나온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러면 정 총리께 묻습니다.

정 총리께서는 올해의 일자리 사정이 작년보다 호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상반기에는 고용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1/4분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됐다가 결국은 0.2%로 끝났는데 금년에는 5% 성장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것으로도 일자리가 좀 늘어날 것이고 또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대책에 나서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 성장이 된다 할지라도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늘 성장에 후행하지 않습니까? 6개월 내지 1년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에 작년 수준으로만 회복되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십시오.

대운하 삽질을 막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에겐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에 대한 집착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만 갑니다. 대운하를 위해서라면 진실에 대한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1을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텔레비전에 나와서 참여정부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 국민의 정부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문건을 직접 흔들었습니다.

정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두 문건에는 61개의 국가하천, 3700여 개의 지방하천, 2만 5000여 개의 소하천을 포함한 전국의 재해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간도 4대강보다 3배 이상 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61개 국가하천 중 4대강 본류에만 30조 가까이 퍼붓는 대운하 사업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보다 심한 견강부회가 있겠습니까? 이것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수해방지대책과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한 측면에서는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대강 사업은 과거의 계획과 다른 전략적 접근으로 4대강에 먼저 집중 투자해서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면에서도 과거 계획은 수해방지 단일목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4대강 사업은 물 확보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 다목적사업입니다.

○김진표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뜻이 아니고 도저히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마치 같은 것으로 비교하는 그 의도가 4대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지나치게 견강부회하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사업대상이나 기간 등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저는 충분히 비교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참 답답한 정권입니다.

4대강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대운하,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과 재정파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4대강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2008년 12월 25일 총리실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사업을 비교하는 보도자료가 저기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 수심 7.4m, 보 높이 11.2m인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전체 이게 대운하 기준에 딱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당시 2008년 말의 보도자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이나 보 높이 등에서 현재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이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 이 문제는 이따 오후에 김진애 의원님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운하 편집증에 걸린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토목공사를 굳이 밀어붙여야 합니까?

총리,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주변의 그 많은 참모, 전문가, 우리 여당의 경륜 있는 의원들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진정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권엔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민주당이 '노'라고 말하겠습니다. 몸을 던져 대운하 삽질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국가재정을 살리겠습니다.

IT 강국 코리아의 신화가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좀 앞서가자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IT 기반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우리나라 IT 경쟁력이 3위에서 16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소프트웨어 시

장점유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혁명에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70년대식 삽질경제에만 매달려 시대를 역주행할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IT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해외 블루오션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파크라는 기관 어떤 기관인지 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하려면 제품설계 단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과 같은 현지 수요업체와 사전적 네트워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아이파크를 현지 사정에 정통한 IT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서 운영했고 이것이 미국의 첨단기업들과 한국의 유망 벤처기업을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도, 싱가포르도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아이파크 업무가 KOTRA로 이관되면서 이러한 순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있습니다. 관료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운찬 총리, 이 아이파크 기능을 다시 되살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는 첨단기술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국내 IT 기업 미국 현지화 및 마케팅 지원센터 기능에 추가해서 기술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서 IT BT 등 우리 중소기업 첨단기술의 교류와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표 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른 부처에 통합돼서 유명무실해진 정보통신부와 또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서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IT와 R&D 정책을 총괄하는 신성장동력부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IT와 R&D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고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현행 정부조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수행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 한가하게 정략적 목적으로 상생의 행복도시를 상극의 블랙홀로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 술책이나 부릴 때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도권은 고부가 첨단산업기지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워야 합니다. 경기도를 국가경쟁력 교육경쟁력 1위, 유럽의 강소국 핀란드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설립된 파주 LCD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두세 개는 더 만들어야 합니다.

정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도권은 난개발을 부르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에 대한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도 수도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여건 성숙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수도권 정책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기업의 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이미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서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대책의 성과와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진표 의원 덩어리 규제를 통째로 들어내는 특별입법이 없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개별입법으로는 수도권의 규제가 너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표 의원 총리,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김진표 의원 수도권이 고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인허가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덩어리 규제를 통째로 철폐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모든 업

무를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창조적 사고가 자라나려면 콘크리트 경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스스로 낡은 국정철학을 리콜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리콜이 늦으면 늦을수록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행복도시 원안 폐기 시도 중단하십시오.

중소기업의 육성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십시오.

20년 전으로 후퇴한 남북관계 복원하십시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진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소개로 서울 성동 갑 지역구민 48명이 오늘 방청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수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진수희 의원 서울 성동 갑 출신의 진수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46조2항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식 평가가 결코 아닙니다. 지난 1월 27일자 뉴스위크지는 ‘코리아의 도약, 이명박의 도전’ ‘코리아, 아시아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등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을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월 29일 로이터통신은 대한민국이 수년 내에 미·중과 맞먹는 경제대국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려 45조에 이르는 원전 수주는 국부창출 의미에 더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였다는 점이 저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남북통일 역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도 남쪽의 힘만으로도 세계 10위권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제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 7000만 인구와 북한의 부존자원 그리고 남한의 기술·산업이 결합된다면 이제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영원히 선진국의 기술 속국으로 우리를 묶어 둘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부정과 비리·부패 그리고 온갖 사회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국제사회에서의 성과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이러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혼재해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 하나 하나가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엄중함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싸울 때가 결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남유럽 4개국의 소위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가 부각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급락했고 우리 증시도 급락하는 등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지금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남유럽의 4개 국가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아일랜드까지 5개 나라가 PIIGS라고 그래서 아마 그 나라의 첫 번째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피그스라고 해서 5개 나라

의 신용불안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그리스가 제일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일단 그리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익스포져(exposure)가 한 3.8억 불 정도 됩니다. 전체 대외 익스포져 중에서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한 0.7%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만 가지고는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봅니다마는 그리스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나머지 4개 나라로 계속 스필오버(spillover)되어서 그 파장이 더 커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라파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한 46%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글쎄, 그런 영향 플러스 또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확장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또 미국 달러화가 예상 외의 강세를 나타내서 우리 금융시장까지 부담이 된다면 한국 경제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 드리우고 있는 세 가지 하방 리스크라고, 불확실성은 지금 말씀하신 유럽의 신용 불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EU가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EU 내에서 해결점을 찾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금융개혁 제안입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께서 금융개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서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오버슈팅(overshooting)으로 인한 긴축기조로의 전환인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의 최대의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럴까, 하방 리스크, 또는 불확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자위해 볼 때 금년도에 한 5% 정도는 그래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하여튼 계속 주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는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총리, 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행정부처를 둘로 쪼개는 발상, 그게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원안'이라며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원안이라고 불리는 행복도시특별법은 제가 보기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수도권 과밀해소라든지 그 어떤 미사여구나 논리나 명분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수도 분할입니다. 수도를 쪼개자는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중앙행정기관을 나누어 놓는 것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국정은 가까이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동차로 5~10분 거리 반경 1~3㎞ 내에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울의 위치는 처음으로 가장 올바른 수도의 자리가 된 것으로 정부와 국가의 모든 지도적 인사들이 국토방위에 끊임없이 긴장하며 숨쉬고 있을 때, 그 남쪽의 국민들의 믿음과 협력의 마음은 무한히 솟아오를 것이다."

"세계 각국 수도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풀이해 보면 모두 국토방위의 최전방에서 일국의 수도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온 것이다."

총리, 이 발언을 누가 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옥중서신에서 읽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신 글이 아니겠습니까?

○진수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중요한 정신을 제외하고 도대체 무엇을 계승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철학이 있으셨던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 과밀하니 인구를 충청 지역으로 좀 분산시키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또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권력만 분산시킨다고 모든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되지 않는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업무 효율성만 저해, 이전 않기를 잘했다.”

“돈 되는 것은 여기서 하고 돈 안 되고 시끄럽고 싸움하는 것은 충청권으로 보내자.”

“청와대, 정부, 정부부처 일부의 공간적 분리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다.”

자, 이런 발언 누가 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자, 그렇습니다.

수도 이전이 좌절되자 편법으로 수도 분할을 추진하면서 또 그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을 지적을 하는 등 이 어지러운 언사를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노무현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반 이상 옮기면서도 또한 동시에 판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를 또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진수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저는 그 정책에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소위 원안이라고 불리는 수도분할론자들은 세 가지 논거를 내세웁니다.

첫째,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고 약속 파기는 곧 신뢰의 상실이다라는 주장은 지극히 단선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약속의 과정, 내용 그리고 그 약속이 가져올 결과를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입법의 정당성은 또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헌법과 국회법 등이 규정하는 의사 절차에 관한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결과를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실체적 정당성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의 내용이 국익 혹은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수도 분할론은 국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원안, 즉 수도 분할에 집착하는 것은, 또 국익에 해로운 잘못된 결정안인 데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실체적 정당성을 외면하는 것은 충청 주민과 국가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갈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약속은 잘못된 약속일뿐입니다.

또 법으로 한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기본적으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들 상호간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에 의해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함으로써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절히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사정변경의 원칙도 당연히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자님도 논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신의를 굳게 지키나 맹목적으로 작은 신의를 지키지는 않는다. 만일 정의에서 벗어난 약속을 지킨다면 작은 신의는 지켜지겠지만 그보다 더 큰 정의를 저버릴 수 있게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 논거로 수도분할론은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총리, 행복도시법 1조에서 이 도시의 목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행복도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법의 내용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자족 용지가 부족하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원안에 따른다면 그 도시, 세종시에 들어올 기업이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1조의 목적 조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바꾸든지 이 법은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새 발전안, 이른바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진수희 의원 만약 진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행정 비효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특임장관실을 제외한 15개 부처를 5개 광역권에 골고루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좀 상식에 어긋난 말씀입니다만 부처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5개 광역권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16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 지금 15개의 부가 있으니까 서울을 제외한 곳에 하나씩 내보내는 것도 상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게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셋째 논거로 수도 분할론은 수도권 과밀 해소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자, 수도권 과밀 해소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주말에 이동이 용이한 충청 지역이 아니라 출퇴근이 불가능한 저 원거리 남쪽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자, 오히려 행정부처를 충청에 이전하게 됨으로써 세종시는 수도권이 광역화·비대화되고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더욱 혼잡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진실로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의 추진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정 충청 지역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또 수도권 과밀 해소를 원한다면 행정도시보다는 기업도시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포항 울산 파주 아산 등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의 이 훌륭한 경험적 사례를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지역 발전 효과가 더 뛰어난 수정안을 거부하는지, 이것은 바로 원안 고수, 즉 수도 분할 주장이 충청권의 발전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자, 총리 이번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결국 수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이익들이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

총리,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수정 발전안이 국회에서 거부되면 세종시로 오겠다고 정부와 MOU를 체결했던 삼성 롯데 한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오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성 롯데 한화 웅진 등 대기업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또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어 있는 수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진수희 의원 그렇다면 원안에 다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원안에 다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원안은 사실 복합도시라고 하고 그 조감도를 보시면, 원안이 그리고 있는 세종시의 조감도를 보시면 구역별로 첨단산업, 의료·복지, 교육·연구 등 이름은 붙였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거의 아파트로만 채워져 있어서 첫째는 자족 기능 용지가 부족하고,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용지가 부족하고 또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구체적인 유치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발전안은 자족용지 확대, 투자 인센티브 마련,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실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진수희 의원 제가 최근에 듣기로 이번에 세종시로 오기로 했던 삼성의 신규 사업은 원래 해외에 투자하려던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자, 당초 원안에 기업 유치 방안이 다 들어 있었고 그래서 정부안이 새로울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왜 이런 기업 투자에 진척이 없었던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청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많이 접촉을 했지만 관심은 보이면서도 '조건이 맞아야지 들어가지' 하고 그 반응을 보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니까 원안이 껍데기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떤 의원께서 수정안이 껍데기라고 그러셔서 저는 그냥 원안이 오히려 껍데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이번에 국회에서 세종시발전법이 거부가 된다면 중국이나 유럽으로 다시 발길을 돌릴 계획이라고 하던데 들어 보신 일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들었습니다.

해외에 보내려던 사업을 세종시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수정안이 부결되면 해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답답합니다.

자,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의하면 정부 발전 방안은 일자리의 경우는 원안의 3배가 많은 25만 개 그리고 투자 액수 면에서는 원안에 비해 2배가 많은 17조 원 그리고 사업 기간은 원안보다 10년이 단축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세종시의 발전 방안은 원안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권 일부에서 반발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물론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철학과 신념에 기초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행정도시안이 마련될 당시나 작년까지도 세종시 원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 발전안이 진정 바람직한 안이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충청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이 안을 이해하고 또한 도와주실 것으로 희망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제가요, 부안의 예를 마지막으로 들겠습니다.

당시 핵이 폭발한다, 기형아를 낳는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주민들을 선동했던 부안은 지역 발전의 변수가 될 방폐장 유치를 경주에 빼앗겼습니다.

자, 7년이 지난 지금 부안과 경주의 발전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경주에는 8000여 개 일자리가 생겼지만 부안의 지역 발전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 분할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국가경쟁력 저하입니다. 또 가장 큰 피해자는 충청주민들 그리고 바로 국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도 분할을 그대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알면서도 수도 분할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는 부도덕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진수희 의원 힘들더라도 총리께서 하시는 일이 옳고 정의롭기에 반드시 저는 성공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역사와 후세가 높이 평가할 것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진수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잣거리의 장삼이사들과 보통 국민들은 당대에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문제를 내다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을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시의 문제는 과거의 약속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도를 분할함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두고두고 치러야 할

그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하면 어쩌면 아주 작은 비용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문제를 제발 몇몇 정치인의 권력게임 구도로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으로 간다면 총리가 죽고 대통령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안대로 수도가 분할된다면 총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이 죽고 원천기술이 죽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죽고 충청도의 일자리가 죽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민정치의 가르침을 후대에 남긴 세종대왕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세종시가 우리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다면 50년,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그야말로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진수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우제창 의원 소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역구민 서른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이시종 의원님 소개로 충청북도 도민…… 충북 충주·청주 지역구민 서른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음 이시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충주 출신 민주당 이시종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최고의 정책입니다. 헌법 제120조2항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완벽한 작품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거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만의 특허품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7대 대통령들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정 철학을 노 대통령이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불운아입니다. 힘없고 작은 충청도에 태어났다는 게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만약 영남이나 호남에서 태어났더라면 수정안의 '수'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갓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돌아가시어 천덕꾸러기 고아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부모가 세종시를 의붓자식이라고 학대합니다. 밥도 안 주고 굶겨 죽이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난 지 다섯 살 된 세종시라는 의붓자식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의붓자식 구명운동, 세종시 원안 사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세종시 관련 충청인을 비하·능멸·폄훼·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도가 넘쳤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명받자마자 '충청도 사람 섭섭잖게 해 주겠다'는 말로 충청인들을 거지 취급했습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때 '지난 대선 때 531만 표차로 이겼는데 충청도 표가 이탈됐더라도 승리했을 텐데 왜 세종시 원안 공약을 했습니까?',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까짓 충청도쯤이야 하는 투로 묻자 대통령께서는 충청도에 가서 얘기할 때 어정쩡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김진 논설위원과 대통령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5000만 국민이 쳐다보는 TV에서 500만 충청인을 도매금으로 깡그리 망신·폄하·능멸·모욕·비하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형법 311조 충청인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충청인을 비하·능멸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전혀 악의적, 나쁜 뜻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 공약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시종 의원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실 뜻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

○이시종 의원 알았습니다.

총리는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 난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이 60여 년 동안 얼마나 공들여 만든 나라인데 아니, 총리가 뭐라고 이 성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런 상스럽고 천박하고 재수 없는 표현을 써 가면서 함부로 대한민국을 모독합니까?

이는 명백한 국가 모독죄라고 봅니다.

‘거덜’은 양반의 말을 몰면서 ‘물렀거라! 나리님 행차하신다’고 허풍 치는 종을 말합니다.

발언 취소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전혀 나쁜 뜻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만 거칠게 받아들이셨다면 저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또한 주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 원안을 선택하면 쪽박이고 수정안을 선택하면 대박’이라고 충청인을 협박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형법 제282조 충청인에 대한 협박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안대로만 해 달라는 충청인들을 쪽박 신세될 거라며 정말 불길한 말을 한 주호영 장관, 해임하실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해임하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

○이시종 의원 해임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대통령께?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 보도에 대해서 진상을 모릅니다.

○이시종 의원 제가 다시 그러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시종 의원 그러면 정확하면 해임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게 정확하면, 말이 맞으면?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제가 진상을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알았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세계일보, 한겨레신문에서는 충청인을 몰락한 양반으로 지칭한 청와대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진 양반은 주변에서 건넨 보따리—수정안 얘기지요—가 마음에 들어 갖고 싶어 하는 눈치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덥석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치지도 못한다. 그냥 조용히 두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른 척 보따리를 풀어 보는 게 몰락한 양반의 속성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충청인을 비하한 발언의 극치로 형법 제307조 충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라고 봅니다.

총리, 이 보고서 만든 청와대 책임자 누구입니까? 누구에게까지 보고됐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까?

이 보고서 만든 자, 보고를 받은 자, 모두 색출해서 공개하고 파면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시종 의원 한겨레신문과 세계일보에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알아보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파면하실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총리는 대구에 가서는 대구를 위해 삼성 바이오시밀러를 세종시 참여기업에서 뺐다고 자랑했습니다.

충북에 와서는 ‘대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어떻게 기업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대구 사투리로 말하면 충청도 사람들 못 알아듣고 충청도에 와서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대구 사람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한 얘기일 텐데 이는 형법 347조 대국민 사기죄라고 봅니다.

총리 직속에 있는 권태신 실장은 세종시 원안은 사회주의 도시라고 망언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은. 도대체 세상천지에 사회주의 도시가 어디 있고 자본주의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있지도 않은 사회주의 도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총리, 권태신 실장 당장 파면하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대구에서의 제 발언이 오보였고요. 또 권태신 실장의 발언도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겁니다.

제대로 실상을 알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종 의원 이상에서 보듯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충청인 비하·능멸·치욕·폄훼 발언은 충청인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저지른 6대 범죄—충

청인 모욕죄, 국가 모독죄, 충청인 협박죄, 충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국민 사기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갈죄—우리 충청인들은 끝까지 법적·정치적 투쟁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대대손손 가슴에 영원히 새겨 놓겠음을 천명합니다.

총리는 세종시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표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전을 행정 부수도로 공약한 이후에 78년 박정희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 백지화 계획 발표했고, 85년 전두환 대통령, 90년 노태우 대통령, 92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가 행복도시 원안을 공약했습니다.

1967년 영화 '서울은 만원이다', 그때 당시에 수도권 인구 690만, 우리나라 2900만의 23.8%뿐이 안 되는데 서울은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977년 조선일보가, 91년 조선일보가 논설을 썼고, 1992년 이호철 작가가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총리, 이 표를 보시면 세종시가 노무현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고 역대 7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노 대통령이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오히려 세종시 백지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된 거라고 봅니다. 즉 세종시 수정안, 되면 좋고 안 되어도 충청권 500만 표 버리는 대신에 수도권 2500만 표 얻으면 2000만 표 순익이 아니냐, 5배 남는 장사 아니냐, 이런 사업가적 계산에서 탄생된 것 맞지요?

그리고 노무현 흔적 지우기, 노무현 대못질 빼기, 그런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순진해서 대못질하면 아무도 못 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까짓 것 대못 정도야 장도리로 뺄 게 뭐 있어, 불도저로 통째로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시종 의원 답변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저는 현 시점에서 세종시에 중앙부처를 상당 부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충청도로 보나 나라 전체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이시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마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예, 알았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신뢰와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추진할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다릅니다. 그대로 추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위기와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자, 그것은 알았고요.

우리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저는 따라서……

○이시종 의원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 시간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정운찬 따라서 대통령과 저는 온갖……

○이시종 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질문에만 답변하시고……

○국무총리 정운찬 답변드리는 겁니다. 통째로 어떻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대통령과 저는……

○이시종 의원 의장님, 발언 좀 제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부의장 이윤성 그런데 이시종 의원님, 답변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적당히 봐서 끊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따라서 대통령과 저는 온갖 정치적 부담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의원 총리, 국가 백년대계 누가 정하는 겁니까?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 백년대계입니까? 루이 14세처럼 '짐이 국가다'라는 그런 논리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권이 또 바뀌면 국가 백년대계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것이 헌법에 있습니까? 국회가 의결했습니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까? 국민이 동의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교과서에 나옵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저희가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자고 해서 국회에다 법률안을 개정해 달라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시종 의원 이는 오직 대통령 개인 생각이고 총리는 1급 앵무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은 국민의 75%, 국회의원의 89%, 헌법재판소의 헌법 합헌 판결 그리고 당시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세상의 으뜸, 세종대왕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은 재벌 특혜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라는 용어가 전혀 안 맞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불경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충청인·국민·야당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수정안은 '단종시'가 맞고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양대군의 '수양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시종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국무총리 정운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시종 의원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개인 기업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해진 법에 따라,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 따라가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무식하니 깨달을 때까지 교육·홍보시키겠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청와대, 총리실, 장관, 국정원, 여당 당직자들 할 것 없이 대거 동원해서 충청도 내려 보내 가지고 충청인들 간담회 갖고, 밥 사주고, 언론사 광고 내 주고, 지방 언론 독점 보도하고, 수정안 찬성 집회에 일당 3만 원씩 줘 가면서 동원하고 여론몰이, 여론 조작하는 등 우리가 볼 때는 혈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충청도 여론은 원안 찬성이 점점 높아갑니다.

총리, 지금 충청인들이 대통령께 원안대로 해 달라고 울고 불며 애원하고 통사정하고 소리치고 잘못한 것 없는데도 빌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죽는다고 해도 대통령께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저항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충청인과 국민들에게 저항과 투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혹시 이 나라에 5·18 민주화, 6월 항쟁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금 우리는 민의의 전당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세종시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사건에 견주는 것은 지나친 비유이며 독재에 맞서 피 흘려 민주주의를 지켜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한 상당수 충청인들의 서운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 발전은 국가와 충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시종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 표를 봐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 원안 대 수정안 비교를 한번 해 본 겁니다.

혜택받는 기관 수인데 정부 부처는 원안은 27개 기관이 혜택받고 수정안은 17개 기관, 공공기관은 211개 기관인데 86개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185개 단체 대 63개 단체, 국민은 54.1% 대 45.9%가 원안이 훨씬 더 혜택을 받는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포항과 울산 같은 도시들은 행정기관이 와서 지금처럼 발전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안 가고 기업이 가야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행정기관을 빼내도 서울은 포항이나 울산처럼 발전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이시종 의원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모님 모실 때 장손이 모시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둘째, 셋째도 모십니다.

행정기관을 서울에 두든 세종시에 두든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두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로 한 시간대, 고속철도로 두 시간대인 나라, 엎드리면 코 닿는 나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 땅인데 세종시에 둔다고 나라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안 지키면 신뢰가 깨져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좁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중앙부처를 쪼개야 균형발전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이나……

○이시종 의원 저, 제 질문을 잘못 들으시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개인이나 국가나 신뢰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명백히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잘못입니다.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 백년대계, 국가경쟁력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총리는 총리직을 제의받기 전에 수정안이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한 적 없지요? 세종시에 대해서 논문이나 기고 이런 것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열하루 만에 2002년 12월 30일 서울대 총장 정운찬은 “모든 것이 서울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가 생긴다면 그곳에 제2 캠퍼스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관악 캠퍼스가 과밀 상태이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묵시적으로 인정 내지 간접 지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 9월 총리직을 대뜸 수락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대통령님, 뜻은 고맙지만 제가 서울대 총장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간접 지지했고 그 후 한 번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 누가 될 것 같아 사양하겠나이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내 평생소원은 총리, 꿈에도 소원은 총리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사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제가 서울대 제2 캠퍼스를 세종시에 설립하고 싶다고 한 것은 신문의 오보였습니다.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 취임하기 이전에도 세종시에 관해서 발언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세종시 수정안은 지금 출구전략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출구전략 들어가면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저는 총리께서 희생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총리로 부임했다가 해결도 못하고 퇴장 당하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총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대통령과 친이계한테는 소임을 다 못 해 죄를 짓는 거고, 야당과 친박계·국민들한테는 영원히 낙인찍힐 거고, 고향 사람들한테는 매국노라고 찍힙니다. 총리 그만두면 제 생각에 이민 가야 될 것 같은데…… 보호막도 없어지고 구원투수도 없습니다.

총리, 그렇다면 미리 사표 내는 게 대통령께도 부담 덜어드리고 본인에게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세종시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여와 야,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서 합리적·이성적 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열린 마음으로 항상 경청해 왔고 또 언제든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제가 발제한 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이 의원님이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저는 국회가 지난날 물리적 폭력으로 해서 상당한 비난을 국내외적으로 받아 왔는데 의원님, 물리적 폭력도 폭력이려니와 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국회에 와서.)

○이시종 의원 지금 뭐……

의장님!

여기 국회입니다.

충북 관련 현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됩니까? 그리고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륙첨단산업벨트 언제 추가 확정되는 겁니까? 세 가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난달 충북 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때 제가 언론 등으로부터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여러 우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평가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작업이 끝나면 충북지역에 경제자유지역을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좀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송 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서 반영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2월에 발표된 2단계 지역발전종합대책에 빠져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정부는 초광역개발권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권과 접경지역 등 4대 벨트와 연계한 내륙 특화벨트도 추진 예정인데 내륙 특화벨트는 지금 지자체에서 제안한 개발구상을 지역위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4분기 중 대상 권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시종 의원 예, 들어가세요.

국민 여러분!

차라리 이 기회에 저는 행정수도 자체를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은 600년 된 정도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조선 초기 470여 년 된 정도인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 이전한 것도 위헌입니다. 위헌의 위헌은 합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과 균형발전, 행정비효율 문제 동시에 해결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세종시 수정안 절대 안 됩니다. 충청도민들 설득한다고 설득 당할 사람도 아닙니다. 국회 통과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력낭비, 시간낭비, 갈등 유발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거두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산적한 민생 문제, 남북 문제, 국제 문제에 야당과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올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우리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500만 충청인은 세종시 백지화를 시도하는 어떤 세력과도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해 낼 겁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시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o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호르스트 쾰러) 방청

○의장 김형오 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국회를 방문하신 귀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호르스트 쾰러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께서, 그 일행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귀빈석에서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독일 대통령 일행의 본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뜻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박수)

대한민국국회 방문 및 본회의 방청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4시53분)

○의장 김형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독일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신 고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덕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서초 을 고승덕 의원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독일연방공화국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님과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기(史記)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자이민위천(王者以民爲天)이요, 이민이식위천(而民以食爲天)'이라, "임금 노릇을 하려는 자는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면서 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사기의 이 구절을 여전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식(食)', 즉 '먹을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서민경제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이 허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의 현실은 실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지난해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백수가 4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고용 불안은 노동수요 그리고 노동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보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주력업종인 전기·전자가 너무 자본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서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적고 또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수출기업들이 부품과 소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취업유발계수가 낮습니다. 게다가 고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서비스산업이 아직 덜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질문지가 미리 나가서 그런지 정답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맞습니다.

내수보다 제조업 또 수출 위주로 성장해 왔는데 수출이 늘고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도 일자리는 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융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앞으로 성장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규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관료들 또 관련된 협회, 업체, 직역단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커녕 그것을 대변하는 데 급급한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공감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설득 그리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 있으나 아직 많은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승덕 의원 앞으로 국가에서 너무 전통산업이라든가 제조업, 수출업 중심보다도 서비스업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몇%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시중에 우스개 말로 9988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소기업은 기업 수는 99% 되고 고용은 아마 88%보다 조금 넘는 9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도 역시 수요·공급을 다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고 또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잠재적 노동자들이 거기에 진출을 안 하려는 것이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저는 대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담합하고 또 중소기업들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아직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백화점 수수료 실태조사를 해 보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고승덕 의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국감이 끝나고 나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월입니다. 그런데 왜 조사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지, 어떤 실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대기업, 한국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C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리덕션(Cost Reduction)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윤을 잘 못 올릴 때 그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도 중소기업을 위하고 또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는 아주 많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판매수수료율이 대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거기 알아보니까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대개 26~27%인데 이것은 뭐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는 아직 인쇄되지 않았지만 지금 연구는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연구결과 이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한 그 결과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고승덕 의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대체로 우선 불공정 행위 감시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나와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일반적으로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요.

백화점 수수료 실태조사 그것 빨리 결과가 나오고 정확한 대책을 빨리 좀 발표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이번에는 노동공급 측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년실업률 벌써 10%를 실제로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구인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은 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고승덕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84%를 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공급에 과잉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대학 졸업생들이 기업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출 정도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승덕 의원 아마 기업에서 딱 맞는 인재는 교육현장에서 나오지 않고 또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면서 근로자가 돼야 될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 여기에 저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물론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금방 현장에 가서 일할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대학은 그보다는 기초를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대학도 있겠으나 현재 일반적인 인식은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같습니다.

○고승덕 의원 이번에 대학 학자금 지원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재정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마는 그 결과 앞으로 대학 진학률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뭐 지금 84% 정도면 거의 맥시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를 더 늘릴지 안 늘릴지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고승덕 의원 예, 좋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도 적어도 줄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고승덕 의원 고학력화를 향하는 사회적 투자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사회적 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학력 실업, 중소기업 구인난 이 모순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도 만든다든지 또는 우량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서 청년-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도 줄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가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을 좀 더 개선하게 되면 이것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공적자금 또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을 끌어다 쓴 주요 기업들의 매각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총리실 질의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매각 가치의 극대화만 내세우지 말고 매수자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평가 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금융위나 금감원 그리고 산업은행 쪽에서는 매각가치 극대화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 케이스처럼 실제로 먹튀로 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낸다고 하게 되면 매각가치 5%를 더 받겠다고 해서 세금을 결국은 100%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자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기업의 민영화뿐만이 아니라 정책금융이 투입된 이른바 민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이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사실 금융감독 당국보고 감독을 더 강화하라고 어떤 때는 지시하고 어떤 때는 권고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매각가치 극대화만 내세우지 말고 매수자금의 투명성과 건전성, 분명히 하나의 고려 요인으로 채택하도록 분명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또 한국거래소 상장 같은 일부 상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된다면 해당 기업, 특히 주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주주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면허를 줬기 때문에 지금 상장 차익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국가로부터 주식중개권이라고 하는 독점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고승덕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 면허가 기업 가치에 기여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장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독점적 이익을 국가가 허가 또는 면허로써 부여한 방송 민영화 차익,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과 주주만 아니라 국가도 면허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러니까 단순히 알아서 기여한다 이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보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여부는 해당 기업의 법적 성격, 소유 구조, 이해당사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생명보험회사와 같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단지 국가가 면허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상장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미국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 이런 제목의 책에서 지난 400년간 일어났던 금융위기의 원인을 과잉 유동성,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낙관, 그리고

감독 기능의 약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잉 유동성 그리고 금융 감독의 문제는 따로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총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유동성을 다루는 핵심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결정권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수단인 감독 기능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은법은 기재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금통위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금통위 참석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우리가 이번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얻을 수 있던 큰 교훈 중의 하나가 정책 당국 간에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금년부터는, 중앙은행에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공개적인 그런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통위에 법에서 보장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 대표가 중앙은행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덕 의원 지금 선진국은 특히 미국 중심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독립성 강조를 너무 강조하면서 오히려 감독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 장관께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적절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실 수는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기본적으로 정책금리는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실물경제 상황이라든지 금융시장 동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아울러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하방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는 정도를 보아서도 금리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직도 당분간은 전체적인, 현재 취하고 있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해 가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작년 하반기에 많은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이 금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1분기 인상은 어렵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금통위에서 제반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승덕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위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 0.01%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고승덕 의원 기재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좀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증권업계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기획재정위에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현재 이 관계 법안이 법사위에 이송되어서 지금 계류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입장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아직은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출하였고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현재 기재위에서 마련되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도 실제로는 3년간은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3년 후부터 실제로 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고승덕 의원 지난번 한은법도 그렇고 파생상품 과세법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금융 쪽이고 정무위 관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위 쪽 의견을 너무 청취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난번 G20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국제 금융질서의 혼란을 막고 또 금융위기의 촉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자금 흐름, 특히 투기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토빈세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일부 국가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자본통제 조치는 기대하는 선순환보다는 부작용과 역작용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덕 의원 요즘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 전세금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상승하면 매매값이 상승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의 선행지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요즘 전셋값 상승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아파트값 상승의 선행지표로 보고 계신지,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성격이 강한데요, 첫 번째는 학군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봄철 이사 수요가 맞물린 데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시기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 시기가 분산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가 2월 들어서는 학군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동산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협의를 통해서 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미시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드리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진동수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그룹 문제입니다.

지난해 워크아웃 신청할 때 총수일가는 계열사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채권단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행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주주들의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 이런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채권단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적극 설득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카드 수수료 문제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19조 3항 문제인데요, 아파트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 입주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법 규정에 의하면 고객에게 어떤 수수료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조금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정무위에서 수차

논의했듯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국세수납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수수료 전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음 기회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세금 납부라든가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현실에 맞게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고승덕 의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리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금년 11월에 열립니다. 총리께서는 한국이 왜 G20 개최국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G7, G8 또는 G20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G8 체제에서 G20 체제로 갈 수도 있는데 한국이 거기 낀 것은 그만큼 저쪽 G8 나라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데 반해서 한국의 위상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이슈 그리고 또 신흥국과 개발이 제대로 안 된 나라들의 지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이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어떤 기여가 돼야 될 텐데요. G20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G20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G20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 11월 정상회의에 초대할 생각입니다.

○고승덕 의원 아, 그렇군요.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G20이 아닌 그런 나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서 회의 때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이른바 선진국하고 또 개발도상국 간의 사이에 있어서 아주 가교 노릇을 잘하게 되면 국가 위상도 올라가고 G20 체제를 공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고승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올 국정의 최대 목표를 중산층 살리기에 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완화야말로 중산층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2년 전 총선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중산층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으고 땀을 흘려 나가고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고승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좋은 질문을 하신 고승덕 의원의 소개로 서울 서초 을에서 지역구민 열세 명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질문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수고 많습니다.

요즘 소비자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근원 물가라고 그럴까요? 근원 인플레이션, 농축산물과 수입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한 2% 초반입니다. 그러나 한파로 인해서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띠면서 지금 한 3% 내외가 됐습니다.

○임영호 의원 3.8%?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임영호 의원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0.2%인데 19배 정도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의 무역수지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5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렇지요? 작년 1월부터 계속 흑자였었는데 1년 만에 멈췄습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악화 문제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심할 상황은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침에 기획재정부장관께서 말씀했듯이 남유럽 4개국에 대한 이른바 익스포저(Exposure)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산적한 국정 현안을 뒤로한 채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세종시에 맞춰서 국론 분열과 대립,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총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움 같은 것이 총리가 경제 챙기는 그러한 기사, 요즘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충청도에 갑니다. 가끔 제가 KTX 타면서 대전에 같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던데……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개인이나 국가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지킨다면 문제가 클 것을 알면서도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해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영호 의원 그리고 제가……

○국무총리 정운찬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올릴까요?

○임영호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그리고 자꾸 딴 일은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정부는 산재한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처리해 가고 있으며 MB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저는 총리의 저서인 '가슴으로 생각하라'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다, 이익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약속이 아니다, 원칙도 그렇다, 한 번 정한 원칙은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유리할 때는 지키고 불리할 때는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 구구절절한 그런 말씀이신데 세종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의 대통령선거 두 번의 총선 그리고 작년 재·보선에서도 여야가 약속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행복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의 4분의 1인 5조 7000억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 역사와 국민 앞에 한 약속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약속 아닙니까?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운찬식 약속과 원칙,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총 사업비의 4분의 1인 5.7조 원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규모는 아주 크지 않더라도 강한 국력을 갖춘 강중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중국가 건설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자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허락하신다면 앞에 질문에 대해서 더 대답을 드리고 지금 질문에 대해 해도 괜찮을까요?

○임영호 의원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서 더……

할 말씀 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세종시 원안으로 할 경우 정말 국정 수행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정부가 정치적 논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과 관련해서 세종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적은 없고 애초부터 원안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많다는 저의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개념이지만 제 책에 쓰여 있듯이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믿고 따르는 규칙과 구성원 간의 신뢰와 같

은 사회 공동의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호 의원 지금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즉 사회적 자본의 핵심, 제가 볼 때는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라고 봅니다. 즉 이 말 속에서는 원칙과 신뢰가 기본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원칙과 신뢰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 대신에 세종시 원안 수정과 같은 반칙과 불신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 자본만 양산하고 계신지 저는 유감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1월 달에 발표한 국민상호 간의 신뢰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뢰도가 28.2%입니다. 선진국의 한 2분의 1 수준이고 OECD 19개 회원국에서 14위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에 누굴 믿겠습니까?

나는 총리도 그 책임이 일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대학에 계실 때의 학자적 양심, 진정성이 저는 어디로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그 원칙과 소신을 가진 존경받는 학자였었는데 총리가 된 후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안의 건설목표를 완전히 폐기한 것입니다.

총리, 1989년부터 수도권에 몇 개의 신도시가 들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대충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100개 정도 되고 지금도 계속……

○임영호 의원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한 10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14개입니다. 14개인데, 서울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1989년부터 시작해서 1993년까지 건설한 1기 신도시 다섯 곳의 개발에 약 48조 들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개발 후에도 인구 과밀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제2기 신도시 아홉 곳의 개발에 약 9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에 무려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도시 한 곳당 평균 10조 원의 개발비용이 들어간 셈입니다.

총리, 이처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매 정권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는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임영호 의원 전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이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겁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정운찬 존경하는 임 의원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 지금 LH로 됐지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체 재원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매각함으로써 투입비용 전액이 환수되는 사업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에 여러 개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재정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LH공사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동안에 적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120조입니다. 하루 이자가 100억입니다. 지금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기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정부가 떠넘긴 겁니다. 결국은 국가부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도권 중심주의를 방치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이에 따른 효과로 산업이 내려오고 교육기관도 내려오고 연구기관도 내려오고 그래서 지방분권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천을 봐라. 행정부처가 있는데 따라간 대기업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천은 아시다시피 서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내처럼 대부분이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남태령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또 과천은 9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변변한 산업용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과천으로 가겠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잔꼼수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에 평당 조성원가 227만 원의 6분의 1 수준인 36만~40만 원에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임영호 의원 이런 원형지 공급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원형지 공급에 따른 기업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원형지는 잘 아시다시피—어쩌면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주는 것입니다. 실제 공급가격은 개발비용까지 합하면 인근의 산업단지와 비슷해서 결코 싸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36만~40만에다가 그 개발비 한 40만 합하면 80만 원 전후가 되는 건데, 오송이나 오창 지역의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통상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용지는 좀 싸게 공급하고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는 시가로 공급해서 LH공사가 자금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국민이 제 얘기가 맞는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는 판단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가격 227만 원과 공급가격 40만 원의 차액이 평당 1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원형지이기 때문에 개발비 40만 원을 제하면 15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입주기업들이 당장 가져가는 이익입니다.

전체 자족용지, 정부가 얘기하는 450만 평 중 60%까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게 되면 그 차액이 무려 4조 500억입니다. 더군다나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6곳의 기업도시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땅값 특혜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세종시 원형지 공급방식 확대로 인한 총 재정소요액은 34조~36조입니다. 이 정도면 지나친 재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어느 의원이 질의하는 것의 답변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되면 들어오기로 한 삼성 등이 외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반 협박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안으로 해도 그 기업들은 오는 겁니다. 또 이 정도 인센티브의 10분의 1만 줘도 입주하는 데 전연 걱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형지 공급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까지 확대하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인 선심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에 원형지 개발의 전권을 줌으로써 초래될 난개발, 국가정책의 실종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임영호 의원 예,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지금 세종시가 2200만 평인데 그중에서 소위 자족용지로 쓰이는 것이 한 20% 정도인 400여만 평입니다.

○임영호 의원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데 그중에서 또 산업용지로 쓰는 것은, 소위 녹색산업용지로 쓰는 게 110만 평, 120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형지 공급에 따라서 LH공사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종시 발전안대로 할 경우 적자가 없고 오히려 1.1조 원의 흑자가 난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요.

○임영호 의원 하여튼 총리께서 말씀을 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고요.

○임영호 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벌에 대한 큰 특혜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재정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LH공사는, LH는 일종의 국가기관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공사입니다.

○임영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총리가 그렇게 극구 반대, 부정적인 견해를……

봐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한 말씀만……

○임영호 의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동안 사실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자꾸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책을 제가 읽어 봤어요. 그래서 표시까지 이렇게 해 뒀습니다. 거기에 '재벌이야말로 자유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 '자원배분의 방향을 주도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적 이익이 발생할 여지 이런 것을 창출하고 있다. 그 이익의 대부분은 재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재벌에 대해서 그동안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갖고 있는 총리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180도 달라진 그런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학자시절 저는 건설적 비판자적인 관점에서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지적하고 고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의 확보와 위기극복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재벌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영호 의원 총리께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안 변했습니다. 그때는 건설적 비판자로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서 이것을 고치자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임영호 의원 총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금년……

○임영호 의원 수없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금년에 400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임영호 의원 407조에다가 이자비용만 2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2013년에는 약 500조입니다. MB 5년 동안에 200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GDP 대비 평균 70%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채무는 아주 순식간에 증가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3년에 약 80%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약 200%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국가채무 증가율이 30.6%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안 그렇습니다.

○임영호 의원 우리가 이렇게 IMF를 조기 극복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큰 공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2조 5000억의 세종시 원안보다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60조 원의 수정안, 이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좀 고쳐 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 수정안으로 하면 재정이 60조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옳지 않고요.

○임영호 의원 전에 총리께서……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세종시……

○임영호 의원 봐요, 총리!

전에 한번 1월 12일에 발표할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을 2배로 투자하고 고용을 3배로 창출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고 국민들한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발뺌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예산을 언제 2배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임영호 의원 그것 한번 볼까요?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임영호 의원 각 조간지에 다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임영호 의원 지금에 와 가지고 발뺌하지 마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세종시 22조 5000억의 예산은 14조는 LH공사가 땅을 샀다가 그것을 개발해서 팔고 결국은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정부의 돈은 8조 5000억 원이 들어가고요.

○임영호 의원 봐요, 총리!

LH공사가 빚지는 것은, 지금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금년에 국가가 보증을 안 해 주면 공사채 인수를 안 한다면서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LH공사의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듯이 LH공사는 1조 10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누리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잘 지켜 나간다고 하는 것에 동감을 하고, 의원님이 앞으로의 한국의 재정적자 또는 국채 이런 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타당한 걱정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제 말씀은 일본의 경우는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거의 무한적으로 정부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정부는 작년에 추경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해 가지고 상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지만, 금년에 또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또 했다가는 재정건전성이 깨질까 봐 지금 추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표는 2013년 그리고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고 또 2013년부터는 GDP분의 채무, 이것을 갖다가 대개 35% 내외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국민이 이해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종시 수정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서 세종시에 4조 5000억 원의 대기업 투자유치로 2만 3000여 개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LG가 파주 LCD에 2조 50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의 고용을 했나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200명입니다. 삼성은 2조 원 투자로 LG보다 13배나 많은 1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없이 그냥 숫자만 부풀려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데 총리, 이런 것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제 얘기 듣고서 반박하십시오.

또한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4조 5000억, 이것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3분의 1이 토지매입비에 불과하고 3분의 2는 현 정권 임기가 끝난 다음인 2013년부터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업들이 권력의 눈치를 봐 가지고 땅만 사 놓고 죽은 권력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투자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업체인 SSF라고 있습니다. 한 140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매출통계도 없고 직원도 단 2명입니다. 자본금은 겨우 71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는 수리 중이라고 하고.

총리, 이런 기업이 과연 14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는 글로벌 투자유치라고 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만극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임 의원님,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액하고 고용인원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LCD 공장은 현재 종업원만 9000명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의 고용인구 1만 6000명 중에서는, 삼성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만도 4000명이 될 것이고요. 또 상품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고용창출효과는 2015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업들이 4조 5000억 원 투자를 할 거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기업은 사실 세계적 기업들로서 투자 분야는 기업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미래 분야인데 이들 기업들이 지금 하루빨리 투자를 하고자 해서 금년 말이라도 착공하게 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법만 개정시켜 주신다면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영호 의원 총리, 제가 볼 때 질의하는 분보

다 더 많이 답변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시간이 제 답변하고 관계없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시지 않으셨……

○임영호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당 의원이 질의할 때 주로 말씀해 주시고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럼 SSF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임영호 의원 ……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오피스 계획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들은 적은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임영호 의원 그런데 이것은 뭐냐, 스마트 오피스 이거 IT 기반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현재 4%인 원격 근무율을 2015년까지 전국 곳곳에 스마트 오피스를 설치해서 20%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45%, 네덜란드는 49%, 일본은 15% 정도 원격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원안의 비효율 근거로 업무보고를 하러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길바닥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 부을 거라고 선전하는 정부의 논리하고는 전연 맞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스마트 오피스 계획은 주로 단순·반복적인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원격 처리가 가능케 해 주는 것이고요.

중요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가 빈번한 중앙부처 정책 업무에 스마트 오피스 계획은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영호 의원 끝으로 지난 8일 조치원에서 수정론 찬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일부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일당 3만 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개인들이 하는 집회에 돈이 어디서 나온 거를 정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임영호 의원 수정론은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뿌려 갖고서 지지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임영호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2000년 12월 25일에 한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목표 설정과 무원칙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불투명성의 증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우리들의 희망을 앗아 가고 있다', 현재 총리의 10년 전의 글이 이명박 정부의 모습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세종시 건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정부는 즉각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예, 임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 갑 출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정치 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스, 그 보스의 정치 신념과 가치를 함께하

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기환 의원 일부 정치인들?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보스를 따르는 정치인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보스가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시겠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 보스라는 의미는 수장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기환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들의 보스는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님,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학자로 남겠다던 총리님이셨고, 또 '내 말은 곧 문서다' 이런 말을 하셨던 총리님은 이제 행정부 공무원이 되신 것입니다. 행정부 공무원께서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생각해 볼 일이지 잘못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앞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거칠었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거칠다고 생각하시는 표현이 있다면 그건 저의 불찰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러면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파가 과거처럼 돈으로 하는 그런 계파의 보스며 또 권력을 임의대로 움직이는 그런 계파의 보스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렇지 않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게 거친 표현이었다면요.

○현기환 의원 행정부 일부 공무원들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적용한 도시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언급한 분이 있고요. 또 그분은 '세종시 원안을 가지고 신뢰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태도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습니다. 또 그분은 '세종시는 그 자체가 수도 분할로 50년, 100년 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허위사실과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상당 부분 그 발언의 내용이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제가 인용해서 언급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수도 분할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도 옹호를 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언론을 보고서 알았습니다만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왜곡됐다고 들었습니다.

○현기환 의원 '이런 발언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총리실 고위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그게 정확히 보도된 거라면 안 했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제 말씀은 언론에 왜곡 보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님, 언론 탓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조선일보 2월 4일자, 연합뉴스 2월 3일자, 연합뉴스 2월 3일자 참고해 보시고 그것 잘못되었으면 정정 청구를 하셔야지요. 왜 언론 탓을 하십니까? 이런 발언을 분명히 공·사석에서 했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총리님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행복도시 추진이 수도 분할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께서는 헌법재판소 위에 계시는 분인가요? 2005년도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현기환 의원 모르고 계세요? '행정도시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다'라고 2005년도에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님을 비롯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수도 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공세고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리님의 생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처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다'라고 2005년도 헌법재판소 판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도 분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총리님은 과연 어느 나라 총리신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여러 번 사실상의 분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기환 의원 그런 표현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쓰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정말 막무가내 총리님이시네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계속 쓰겠다는 총리는 그러면……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법체계가 있고 또 사회 전체를 사고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 15부 중에서 9부가 가고 또 2처 2청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의 행정부의 분할, 더 크게는 수도의 분할이라고 저는……

○현기환 의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기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나라 헌법재판소는 총리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입니까?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국민을 속이는, 호도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고 이데올로기인데도 끝까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월에 수정안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 첫 번째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행복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에서 말하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전 허용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올 기업이 세종시로 갔다고 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기환 의원 그런 형평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써 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그런데 수도권은 11.8%의 면적에 불과한데도 지금 인구가 어떻게 밀집됐습니까? 1960년도는 20%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는 49.8%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리께서는 기존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억제 정책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반드시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많은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역시 경제력이 있는 데 모든 것이 자석처럼, 자력처럼 빨려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기환 의원 참 정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의 수도권 억제 정책이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점점 인구가 밀집되고 이런 것은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제반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 모든 자원을 흡수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홀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도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좋은 뜻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세종시를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 그것의 파급효과가 부근까지 퍼져감으로써 한편으로는 그곳의 과학도 발달하고 부근의 과학도 발달하고, 그곳의 경제도 발달하고, 부근의 더 나아가서는 호남·영남 지방까지 경제가 발달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의 균형발전을 우리가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간다고 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여러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기환 의원 행복도시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취해 왔던 그런 수도권 진입 억제 정책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복도시로, 즉 공주·연기로 행정부처를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2003년 2002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분산 정책이 필요하며 그중 행정기관의 지방 분산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본사들이 왜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가장 큰 장애요인 49.3%가 국가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즉 행정기관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연구들은 행정부처가 지방으로 갈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화상회의, 또 하나는 정치체제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총리 분권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화상회의는 무의미한 것이 돼 버렸고 지금 결국은 정치권력이 서울에 있는 한 세종시에 행정부처 몇 개 옮긴다고 그래 가지고서 균형발전은 거두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은 그냥 내놓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연구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천은 계속 실패하는 행정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5만으로 계획된 과천은 현재 7만이 되어 있고요. 또 총리께서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자족률과 자족성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데 과천은 자족성이 1이 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기능, 정책결정기능이 옮겨가게 되면 또 소위 인허가 기능이 같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연히.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부처 분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 생각 같아서는……

○현기환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또 독일 경제학자—오늘 대통령께서도 다녀 가셨습니다마는—에른스트 슈마허라는 분은 '주변지역의 발전이 수반되지 않는 중심부만의 발전은 허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기환 의원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슈뢰더 총리는 지난번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행정부처의 중추기능은 사람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 이전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수도권 과밀 해소가 이른바 세종시 원안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행정부가 둘로 나뉘어져 있게 될 때 그것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지적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적시성이라든지 감응성도 적고 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의 원안이다, 수정안이다의 문제는 아주 가장 큰 것은 결국은 행정부처가, 뭐 표현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크다, 그것은 제가 나라의 총리로서 참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구의 반……

○현기환 의원 영국이 결국 인구의 35%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또 파리권에 19%가 되어 있지요? 동경에도 일본 인구 33%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기능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기능을 이전했다고요?

○현기환 의원 예,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누가 이전을 했습니까?

○현기환 의원 행정기능을 이전한 사실 모르고 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쪽 나라들에서요? 중앙부처 기능의 이전은 없습니다.

○현기환 의원 중앙부처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부 이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는……

○현기환 의원 사람이 간다는 것은, 기능이 가지 않으면 사람이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중요한 사람들은 안 갑니다. 전부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의 수도에는 행정부는 물론이려니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전부 1~3㎞ 이내에 있어 가지고서 아주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모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일은 같이 해야지 멀리 떨어져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굉장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글쎄요.

결국 수정안에서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과거 수도권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강력한 분산 정책만이 그야말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현기환 의원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허락하신다면…… 제가 대답 대신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기환 의원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하시고요. 제 질의 시간을 뺏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행복도시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핵심 기능과 고등학교·대학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원안과 수정안이 별반 차이가 없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는 행정부처 이전 플러스 무엇이 있는데 그 플러스 무엇 그런 것들은 행복도시의 지도에는 다 '무엇 한다' '무엇 한다' '무엇 한다' 나와 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연 없이 그냥 추상적이고 선언적일 뿐입니다.

사실은 행복청에서 그동안에 여러 기업들, 대학들, 연구소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모두 다 관심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뭘 보고 가느냐,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가 없다, 또 소위 자족용지가 6.7%밖에 안 돼서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용지도 늘려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줘야 하기 때문에 원안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부처도 가고 또 다른 자족 기능도 채우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기환 의원 제 질의의 요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져 보겠습니다.

핵심 기능이 수정안에서는 '과학연구, 국제교류, 첨단녹색산업, 글로벌 투자 유치, 대학 기능' 이렇게 들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다 못 들었습니다마는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현기환 의원 원안은 '국제교류, 대학연구, 첨단지식기반' 이렇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선언적인 것이고 지금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기환 의원 원안에…… 법을 좀 읽어 보십시오, 총리님.

원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본계획,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기업별 투자유치 전략까지 짜게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기환 의원 이게 2030년까지면 당연히 그림만 그려 놓고 정부가 방치할 것입니까?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구체성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실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총리의 도

그마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원안의 추진에 따라서 총리실이 지어지고 있는 마당에 어떤 기업들을 또는 어떤 연구소를, 어떤 대학을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을 갖고 어떻게 그 도시를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현기환 의원 자, 시간을 자꾸 뺏으시는데요.

분명히 그 법을 읽어 보시면 진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짜 있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그다음에 수정안에서는 '외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원안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수정안에서 이렇게 열거·나열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고 제가 고등학교……

○현기환 의원 대학도 그렇습니다.

2007년 12월에 고려대학교하고 MOU 맺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런……

○현기환 의원 2009년 1월 달에 KAIST가 행복도시로 가기로 원안에 MOU를 맺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주 소규모의 땅을 분양하기로 MOU를……

○현기환 의원 서울대 제2캠퍼스 이전도 계획되어 있었고 국립대 설립도 검토 중인 상황이었지요, 원안에 의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전연 아닙니다, 거기는.

○현기환 의원 원안에 의해서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기환 의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셔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저는 원안에 의해서 서울대 제2캠퍼스 이전과 신설 국립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봤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기업 유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작성된 행복청 보고서에 의하면 삼성이 이미 태양광산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한화,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이 행복도시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청에서 접촉을 했을 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은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업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 말씀이 얼마큼 틀렸는가 하면요, 2008년 8월 입주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이전 계획을 가진 319개 기업 중에서 81개 기업이 행복도시 입주를 희망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많은 기업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원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기환 의원 당시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수도권 소재 대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 81개 기업이 요구한 부지 면적이 기업당 평균 1만 4362㎡라고 적시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그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기환 의원 한쪽만 계속 보시는군요.

그런데 정부는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도시 수정 작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행복도시 이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온 기업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의 출장 보고서와 계획서들은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기업의 생리를 잘 아시겠지만……

○현기환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기업의 생리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심을 두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현기환 의원 총리님, 세종시 수정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족률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가장 큰……

○현기환 의원 자족률이 무엇인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현기환 의원 자족도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자족용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현기환 의원 자족용지가 6.7%라서 자족도가 부족하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예를 들어서……

○현기환 의원 행복도시 원안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아십니까? 고차 첨단산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용지 부족과 자족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현기환 의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족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참으로 조그만 땅이 산업용지로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좁은 땅에 테헤란로에 있는 금융회사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최첨단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6.7%의 자족기능을 가지는 용지를 가진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50만 인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현기환 의원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는요, 행정 기능이 중심이 되고 첨단 고차 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7%면 충분한 자족용지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총리께서는 그것을 20.7%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공원 녹지, 주택 부지 등에서 빼 와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기환 의원 그런데 그 용지를 자족 용지화시키는 데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기환 의원 정말 진짜 총리님은 답답하십니다.

지금 행복도시특별법 19조를 보면요, 토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20조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장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 토지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자족용지도 있고 인센티브도……

○현기환 의원 자족용지가 되었든 뭐든 토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법의 변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정안이 제출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기환 의원 인센티브요? 저한테 또 물으시는 것인가요?

말씀드릴게요.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2009년 상반기까지 원안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 저가 공급,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유치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었지요. 이미 그 당시에 원형지 공급 방안하고 투자유치 종합계획 2차 안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무슨 인센티브가 없어서 법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도시특별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조세 관련 법안들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원안을 수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결과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까로 돌아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부처가 나뉘느냐 안 나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보태서 현행법대로 한다면 그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 도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기환 의원 들어가세요.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매우 많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역특화발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에 매우 공감하며 더 강력한 분산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 관련 기능을 결정하는 기관이 바다

가 없는 내륙,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73%를 처리하는 부산에 국토해양부가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5조 3000억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조성되는 광주에 문화관광부가 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제 생각이 순진한 것입니까? 첨단산업·의료단지가 조성되는 대구와 오송에 보건복지부가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에 지식경제부가 갈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부처가 가면 정책결정 기능과 인허가 기능이 가게 됩니다.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이 자연 주변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있고 대통령 곁에 국가 안위에 중요한 외교·통일·국방 부서 그리고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능이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입니다. 수도 서울은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부처를 공주·연기로 이전하고 두 시간 거리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행복도시의 원안은 최소한의 분산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현기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이용섭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산업이 공동화되고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입니까, 아니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정책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균형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렇지요?

수도권 중심 발전 정책은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실되고 지방은 공동화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실되는 공멸의 정책입니다. 반대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은 좀 비워서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은 채워서 살리는 상생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들은 무엇인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수도권은 국제 경쟁을 하도록 하고 또 지방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또 특색을 살려서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만들어 갖고 또 그 나름대로 발전하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5+2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국토를 5개 구역 더하기 2개 구역, 광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5개에다 강원권, 제주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 지역의 특수한, 각 지역에서 아주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하고 수도권은, 서울은 이른바 상하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도시와 경쟁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의 기본 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준비되었던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또 국가산업단지도 키우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권 중심 정책인 것입니다.

5+2에는 수도권이 지역발전 주체의 하나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500만의 수도권을 다른 조그마한 경제 주체하고 경쟁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더구나 5+2 발전 정책에서 보면 30대 선도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을 보면 호남권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3개밖에 안 됩니다. 금액은 1조 5000억입니다. 수도권은 10개이면서 금액이 7조 8000억입니다.

이것은 총리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 발전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철저하게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날 수도권에는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할 수 없다고 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기업이 수도권 놔두고 지방에 투자하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국가 균형발전 정책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수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건 불합리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원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 90조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깎았습니다. 90조를 깎게 되면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자연스럽게 45조가 줄어듭니다. 지방 재정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만들고 또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에 그래도 세계 몇몇 나라에서 재정도 투입하고 재정지출도 늘리고 또 세금도 감면하면 경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험적 연구를 몇 개를 토대로 해서 우리도 추경을 통해서 지출도 늘리고 또한 동시에 세금도 감면해 주자는 고육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총리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틀렸습니다.

우선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세금을 깎으면 당연히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만들고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어려울 때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에 의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안 맞는 얘기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지방……

○이용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렵느냐, 화면을 한번 봐 두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 내용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재정 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원 인건비는 필요 예산의 79%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9개월분입니다. 10월부터는 인건비도 지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예산은 필요 예산의 62%입니다. 7개월분만 반영됐습니다. 법정 의무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특단의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예비비라도 풀어서 취약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방재정 여건이 아주 어려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2000년에 한 59%이던 것이 지금 한 53~54%,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위기 극복 노력의 과정에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중앙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에 큰 규모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우선 지방으로 이전하고 향후 3년간 10%까지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들이 살아남아야 되겠어서 상생자금, 상생기금인가요? 그것도 만들고 있는 등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가시적으로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한번 저희 동료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지방 재원이 45조가 감소되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해 가지고 지방 재정 늘어나는 게 4조 4000억입니다. 40조가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료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는 지방 재정 확충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매우 시급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지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이제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그

야말로 지방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 언제쯤 보내실 작정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내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이용섭 의원 최근 일부 여당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는 아직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국민투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용섭 의원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부의 입장이나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들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면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국무총리 정운찬 뭐 개별적으로는 이런 저런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국민투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섭 의원 아니, 이 정부에서 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불길해요. 아니라고 한 것도 막 바꾸잖아요. 그런데 아직 검토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방법을 생각하시는가 본데 정론으로 가세요. 정도와 원칙으로 가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국민투표를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런데 그것도 참 안일한 정부지요. 여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떠드는데 총리도 정부도 검토도 안 하고 있다? 무슨 그런 정부가 다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라고 하는 건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섭 의원 당연히 어디선가 검토를 해야지요. 총리실에서 세종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데도 총리가 국회에 나오면서 아, 이거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도 안 하고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섭 의원 저는 총리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고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세종시 기공식에도 참석했고 혁신도시 기공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5년 동안 여섯 번의 국제 공모를 거쳤습니다. 100번이 넘는 토론회를 거쳐서 세종시 원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전문성도 전혀 없는 정운찬 교수께서 총리로 내정되자마자 이게 문제 있다고 들고 나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 이건 총리 지정 과정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 3개월 만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겨우 일곱 차례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봐도 '아, 이것은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춘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총리와 정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총리도 아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국민에게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총리께 공개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올려도 괜찮습니까?

○이용섭 의원 그러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의원님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이용섭 의원 또 총리님께서 다른 논리를 제시하면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면 제가 준비해 온 얘기들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총리께서 긍정적으로 제가 제안한 TV 토론을 수용해서 토론장에서 100분도 좋고 200분도 좋습니다. 한번 토론을 하실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간, 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리께서는 세종시 수정안대로 경제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지방 경기에 타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의원 어떻게 경제도시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지방도시가 서로 같은 산업과 사업을 두고 경쟁하는데, 그리고 또 세종시는 수도권에 가까이 있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영향이 없을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일반 균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한 곳에서 변화가 있을 때 다른 곳에 전혀 변화가 없으리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이 세종시는 모든 기업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선 세종시의 산업용지는 110만 평에 불과한데 이것은 전국 산단 면적 4억 평의 400분의 1에 불과하고 개발 중인 산단 면적 8000만 평의 8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세종시가 우선 기업을 다 블랙홀처럼 가져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둘째……

○이용섭 의원 그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시 132만 평방미터 부지에 첨단 녹색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총리실과 기본적인 합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한 40만 평 되는데요. 이 40만 평이면 중소기업 300개 내지 5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있는 기업은 들어갈 여지가 없다,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기문 회장님의 말씀이 역시 또 신문에 잘못 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110만 평 중 이미 96만 평이 입주가 확정되어서 세종시에 더 유치할 땅도 없고 더 이상의 기업 유치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 기업은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무총리 정운찬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연구·교육·기업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천기술과 기초연구의 성과를 전국의 혁신기업 산단 등 지방에 확산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산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섭 의원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정부는, 정확히 지식경제부지요, 2009년 9월 16일 날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2 광역경제권에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두 가지를 지정했습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LED, 광산업 쪽 아니겠습니까?

○이용섭 의원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크게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LED를 비롯해서 태양광산업, 탄소저감기술, 광기술기반 융합 등 이런 많은 첨단 녹색 산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할 때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럼요.

○이용섭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정부는 4개월도 안 돼서 금년 1월 11일 날 세종시 수정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탄소저감기술, 바로 호남권 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호남권 선도산업하고 같은데 어떻게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기초적인 것 또 원천기술과 관련되는 것이고 광주 지역을 비롯해서 5+2 광역권에서 앞으로 발전시킬 것들은 주로 응용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다른 지역들 간에는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블랙홀이 아니라 확산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종시하고 다른 데하고 상호 보완적인 분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론과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산업을 갖다가 그냥 한 군데에서만 딱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꾸 하다가 보면 좀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경쟁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세종시에 들어올 것은 주로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 말씀을 요약하자면 세종시에는 원천기술이나 기초과학 연구원들이 들어가고 광주 같은 데는 응용, 상품 이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주에 있는 기업들은 LED 산업이, 이 광산업이 중추적인·핵심적인 겁니다, 50% 이상의 매출액이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제품 생산기술 하는 데입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삼성LED 이것도 생산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광산업 이것은 국민의 정부 때 광주에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구·부산·경남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나씩 지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 LED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삼성LED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삼성LED가 세종시에 1조 원을 투자하는데 광주에 있는 조그만 129개 중소 LED 기업이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논리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 여쭤 보십시다.

아까 어느 의원들 질의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에서 해외에 보내려던 사업을 세종시로 가져오는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건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물어보고 그쪽에서 대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용섭 의원 그렇게 애매한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 마세요. 왜 국회에서 그것을 답변을 못 합니까?

마치 세종시에 삼성을 유치하지 않으면 삼성의 모든 투자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비밀입니다.

어디에다가 얼마를……

○이용섭 의원 비밀이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총리님,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께 하나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금호그룹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 실패에 대해서 오너들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너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나 채권단이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 이전에 협력업체들에게 자금 지원이 안 되면 무더기 도산이 불가피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채권단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이용섭 의원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 들으셨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다행히 대주주 책임이행 문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은 이제 해결을 했고요. 다만 금호타이어노조 동의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조만간에 해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 오너 사재출연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 측 것이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금호타이어 노조.

○이용섭 의원 그런데 그게 안 오면 계속 지원 안 해 주실 겁니까?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

원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융위원장 진동수 하루이틀 내로 마무리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나 또 근로자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설 이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예, 이미 약속한 3800억 원 조기 지원을 비롯해서 금호타이어, 금호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지원과 근로자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서 긴급운영자금 이런 데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좀 나오실래요?

지금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의 광산업, 특히 LED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4대 지역 특화산업의 하나로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1단계일 때, 이게 국민의 정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만, 1단계일 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353억 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단계는 참여정부 때입니다만, 2177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면서 304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지역특화산업으로 광주지역에 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기 단계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초기 단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서서히 자립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일부 광 관련 업체도 방문도 하고 죽 해 봤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 나름대로 재정 지원의 성과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진화하면서 금액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이용섭 의원 또 하나는, 원래 광산업은 광주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서 육성이 됐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남권·전북권·광주권·수도권, 4개 권역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수도권과 영남권, 전북권에 LED 융합기술지원센터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세종시마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삼성LED가 들어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금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LED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부문 발주 시에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추진을 하다가 지금 50%까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 부분에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조명산업은 세계적으로는 GE 등등 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LED 쪽은 지금 아주 초기,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기업의 참여를 완전 배제하게 되면 산업 자체가 성숙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마켓, 시장 형성자로서의 대기업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로 빚어진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자족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철회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경제도시로서 세종시 건설은 정당성도 없고 지방 기업과 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만 하기 때문에 세종시 자체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용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0.2%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하고 호주와 함께 3개국만이 플러스 성장을 했던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상황이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예상했던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최근 현안 위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가 극단적인 침체는 면했지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 문제와 그다음에 금융부실 처리 지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피그스(PIGS) 국가 중에서 먼저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빅스(VIX)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EU 자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유럽 국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의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가능성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구라파의 신용불안은 피그스로 대변되는 대표적으로 다섯 나라의 재정적자 심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유동성 문제로, 유동성 외교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재정적자가 심하고 국가채무가 제일 높은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EU 국가 내에서 임밸런스(imbalance)가 있습니다. 유로체제의 지속을 위해서 EU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 여기를 지원해야 할 독일을 비롯한 북구파라가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부담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IMF가 나서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의 임밸런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11일 날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저희 쪽 입장은 EU 자체 내에서 어딘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만약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나라 외화차입금 중에서 영국계 금융회사가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리스가 만약에 소버린 디폴트(sovereign default)가 생긴다면 그리스 사태에서 그치지 않고 유사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쪽으로 스필오버(spillover),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리스 자체만은 우리의 익스포저(exposure)가 3억 8000만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구라파 전체로 보면 유로가 40%가 넘는 우리가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 동태, 변환 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시각각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조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자, 그다음으로 호주하고 노르웨이, 그다음에 베트남이 금리인상을 했어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우리하고 지금 사정이 다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금리를 변경한 나라가 호주, 지금 말씀하신 나라 외에 이스라엘도 하나 추가되고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몇 나라가 있는데요, 출구전략은 기본 공조하에 구체적인 나라별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주로 지금 보면 자산시장의 버블 또 경기의 과열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금년에 우리가 5%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5%는 작년에 기저효과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2008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 정도로 이제 환원되는, 정상화되는 과정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자산시장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큰 버블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민간

부문의 투자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회복 단계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금리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프리머처(premature),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선진국 내수시장이 취약하다는 것인데, 연초의 선진 대기업 CEO들 발언들을 죽 보니까 신흥국을 저비용 생산기지에서 지금 핵심 수출시장으로, 즉 신흥국 내수시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선진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던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평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라별로 같은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지향 경제이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크고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지금 전문가들의 건의 내지는 제안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수시장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높은 금리의 부담은 투자의 하나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정부가 올해 물가를 3.0% 예상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올해 물가 3.0% 예상했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1월 물가가 3.1%인데 이것은 설 효과로 봐야 되지 전체적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이제 2월 물가는 다시 정상적인 기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월 달에 한파와 폭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문환 의원 예.

자, 그리고 다음에 지난 1월 21일 날 오바마 행정부가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금지를 통해서 위험 사업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 대형 은행의 규모를 제한하는 은행개혁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안이 현실화되는 데는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때 한 4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자 할 것인데 장관께서는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확산이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는 금융개혁 관련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한다든지 헤지펀드나 PF펀드에 대해서 상업은행이 투자를 하지 못 하게 하는, 옛날에 소위 글래스 스티걸 액트로 은행과 증권 업무를 철저히 구분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런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반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국제에 공조하지 않고 미국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니버설 뱅킹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구라파의 경쟁력이 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등 아직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가오는 우리 G20 회담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국제공조를 제안해 올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논의되는 방향이나 그런 과정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문환 의원 상당히 장기화되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런 편입니다.

○조문환 의원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의 주범인 은행을 미국에서도 국민 혈세로 살려 놨더만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자금난 해소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저금리 자금으로 이렇게 위험 투자에 나서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개혁안이 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도 이게 비슷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협의의 통화, 즉 M1이 17.3%, M2 9.7%, Lf 7.6%거든요. 그런데 이 TED 스프레드는 올 1월 기준으로 하면 한 13bp로 단기자금은 굉장히 풍부한 편인데 트리플 B 마이너스 비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250bp로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의 발전이 실물의 발전과 크게 괴리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거기서 거품이 형성이 되고 그게 과잉유동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정신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탐욕이 개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 기능이 자꾸 향상되면서 감독이 강화돼야 할 당위성이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런 부분도 보면 우리도 옛날에는 중심통화지표로 우리가 통화량을 지금 제시하신 M1·M2·M3를 놓고 번갈아가면서 금융의 중심 지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금융이 발전하면서 금리체계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금리가 우리 통화중심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리를 중심으로 금융이 운용되다 보니까 통화량 쪽은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 중앙은행하고도 협의를 하는 데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법은 태생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달에 정동영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을 하자 당시 노무현 후보는 권력만 분산시킨다고 모든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분산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 놓고 노무현 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그 해 12월 인천 유세에서 '돈 되는 것은 놔두고 시끄럽고 싸움하는 것은 충청도로 보내자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행정기관 이전은 돈이 안 되는 것이다', 즉 경제성이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발언입니다.

당선 후인 2003년 11월 달에 신행정도시건설정부합동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때 이걸로 재미 좀 봤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종시를 만든 장본인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정책이 아니라 충청 표를 얻기 위한 정략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포장된 광복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 해소로 포장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것 같습니다.

○조문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문환 의원 다음은 수도 분할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수도 분할 발언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000년 9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옮긴다면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둬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이며 부처 이전은 기능 약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총리, 들어보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어 봤습니다.

○조문환 의원 그다음에 2007년도 7월 20일 날 행정도시 기공식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외에도 2007년 8월 22일 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9월 16일 이해찬 전 총리도 '행정수도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수도 분할이 아닌 수도 이전 취지의 발언들을 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달에 대통령정책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신행정수도건설과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이라는 보고서 65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장기적으로 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도 베를린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을 이원화 또는 분산 배치하는 방안은 효율성·현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문환 의원 자, 우리 수도 이전할 때 효과분석한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문환 의원 기본개발계획 총책임자인 안건혁 교수도 ‘인구 50만 도시라는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인 안은 없었음’이라고 발언했던데요?

○국무총리 정운찬 작년 11월 하순 한국경제신문에 발언했습니다.

○조문환 의원 참여정부가 수도 분할 원안을 제시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도 분할 원안을 제시할 때 50만 인구 설정 근거, 그다음 그 달성 계획, 그다음 국가균형발전의 효과,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등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나 이 말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언적인 면에서 또는 추상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군데 언급이 됐습니다만 구체성이라든지 실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환 의원 그렇지요?

이러면서도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허허벌판에 22조 5000억 쏟아 부으면서 참여정부 시절에 116만 6000명 더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 도시 허가했습니다.

총리, 이것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안 맞습니다. 판교 부근이지요? 여러 신도시 개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조문환 의원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약 발표해 놓고 막상 이전지역은 지정도 안 한 채로 충청 전 지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선거에서 재미 좀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달성계획도 하나 없이 선언적으로 50만 인구라고 딱 해 놓고 균형발전계획이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 대해서 분석자료도 하나도 없이 세부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거 이후에 가장 땅값 헐한 곳에 2003년까지 옮기겠다하고 손 털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무책임한 노무현 표 정치사기극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환 의원 총리, 수도만 분할을 하면 수도권 과밀 해소되고 국토 균형발전된다는 논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부처를 분산·이전해서 균형발전이 된다면 한편으로는 지방의 시도도, 시도 내 실·국을 시·군으로 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문환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마찬가지 논리로 중앙부처가 지금 15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광역시·도 해서 한 열다섯 군데로 하나씩 나누면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가 된다는 논리로 제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는요.

그래서 행정기관 분산에 따라 우선 작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정책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비용과 체재비용 그리고 시간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협의이고 광의의 국정 비효율이 굉장히 큽니다.

적시성 문제, 감응성 문제, 정책의 품질 저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위기 발생할 때 신속·유기적인 대응이 미흡해서 걱정이 됩니다.

○조문환 의원 야당 말대로 행정부처 분할해 가지고 국가적 피해가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이렇게 죽 흩트려놔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부처 이전 효율성 안 떨어진다는데 ‘둘로 나누는 것은 괜찮고 한 네다섯 개로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환 의원 국가 균형발전만을 명분으로 하면 실제로 세종시는 강원도나 아마 경북북부 정도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008년 기준으로 GRDP가 충남이 2위거든요, 울산 다음으로. 그런데 왜 충남으로 이렇게 가는지, 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세종시가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근에 과학도시들도 있고 또 나라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

각은 듭니다만 역시 그 도시를 잘 살도록 해야지, 중앙부처 옮겨놓고 그냥 그 주민들이 기분 좋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오면 기업이 온다는 논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환 의원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총리 장관 지내신 분들도 행정부처 이전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을 했고, 행정부처 이전이 돈 안 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정의를 했고, 대통령정책실 보고서에서조차도 행정부처 분할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행정부처 분할은 비효율적으로 문제가 없다, 행정부처가 가야만 경제성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참 국민들 어찌 볼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수도 분할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요 행정기관 이전이 없는 것은 빈껍데기다, 주요 관청이 내려가야 기업 본사가 내려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 외 지역에 가서는 세종시로 기업을 다 몰아주면 이 지역 고사된다면서 블랙홀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만으로 블랙홀이 생긴다고 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을 반드시 보내야만 경제성이 생긴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문환 의원 총리, 세종시가 제로섬 게임입니까?

‘세종시가 잘되면 우리 지역이 손해 본다’ 이런 논리,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어느 곳도 발전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논리가 되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처음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무도 블랙홀 얘기를 안 하더니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서 블랙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세종시야말로 앞으로 플러스섬 게임을 한국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특히 기업하고 대학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가서 한국 과학 발전의 거점 노릇을 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특히 영·호남에 과학도 발달하고 또 거기에서 경제가 일어나게 되면 영·호남의 그 부근은 물론이려니와 영·호남의 경제가 발전을 해 가지고서 완전한 플러스섬 게임이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아주 정말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좋은 안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럼요.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세종시한테 주는 혜택은 다 줄 것이며 혁신도시는 정말로 틀림없이 해 낼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혁신도시 세제 지원도 세종시하고…… 입주 기업하고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똑같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세종시나 거의 똑같이 해 줄 겁니다.

○조문환 의원 참, 블랙홀 주장하시는 분들, 더 이상 지역주의 부활시켜 가지고 선거에서 표 얻고자 하는 이런 망국적인 행태 자제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명박 정부가 더 싫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원형지 공급이 재벌 특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총리 견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종시가 잘 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오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LH공사가 팔아야 됩니다. 어느 값에 팔아야 될 것이냐? 그 부근의 산업단지와 비슷한 값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송에서 한 평당 8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평당 개발비가 한 40만 원쯤 된다고 그래서 세종시도 한 4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 이제 LH공사가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결국은 적자를 메워 줄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나왔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계산을 해 본다면 LH공사가 1조 1000억 원의 이익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2200만 평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은 1000만 평정도 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배분을 하게 될 텐데 최초의 산업단지는 그냥 원형지로 40만 원을 주게 되면 LH공사는 개발비용이 덜 들어가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을 또 걱정을 하는데 그 난개발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절대 못 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업들한테 땅을

주면 나중에 땅장사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못 하게 다 법적으로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LH공사의 적자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처분할 수 있는 땅을 산업단지는 40만 원으로 분양을 하지만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때 파는 땅값또 그다음에 공공단지 땅값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땅값—새 아파트—그다음에 상업단지 땅값이 전부 다릅니다. 나중에 상업단지는 아마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LH공사의 적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환 의원 이게 중소기업 경우에는 별 관계가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기업 세부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가 보면 원형지로 공급을 안 하는 경우에 다시 대기업에서 재조성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바로 그렇습니다.

○조문환 의원 그래서 이중부담이 되고요. 결국은 원형지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토지개발 비용도 줄이고 기업의 토지 이용 활용도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 특혜 운운하는 게 참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종시가 충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가져온 혼란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이 잘못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책이든 공약이든 신뢰의 문제만으로 놓고 보면 대운하도 하고 수도 분할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운하는 공약 포기가 맞고 세종시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엉터리 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래 70%가 농지로 계획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 복합용도 70%, 농지 30%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힘을 합쳐서 상임위 소위를 통과시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신들이 계획해서 포함시킨 충북을 오히려 제외시켜 주지 않는다고 상임위 계류로 처리를 못 하게 한 민주당은 과연 원안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지고요, 잘못된 줄 알지만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받게 될 정치적 손해도 생각해서 수도 분할 원안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부도덕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당시에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졌음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2004년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 공약을 뒤엎은 뒤에 “사과는 백번 천번이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라면서 “한나라당의 안은 후세들에게 타당하고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행정도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무현표 세종시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수정안에 반대를 한다면 구호 수준의 반대가 아니라 수도 분할이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보다 이 나라 백년대계에 더 부합한다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수도 분할 원안의 고수 주장은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일 뿐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수정안이 더 나은 방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말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고자 하는 용기가 진정한 신뢰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윤성 조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창원 을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빨리 합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델 국가는 어디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뭐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문화가 수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 높으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구체적으로 유럽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나 미국 등을 말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금방 몇 나라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런데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권영길 의원 독일은 교사의 정당 활동, 선거운동 등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영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도.

○권영길 의원 영국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당활동, 제한 없는 공직 후보 출마, 선거운동 등의 거의 모든 정치활동을 하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상급 공무원은 정당 가입만 허용되는 반면 하위직 공무원은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됩니다. 아시지요?

아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프랑스는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나라를 떠나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미국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미국의 경우도 공무원의 업무 시간 중 정치활동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한적입니다.

○권영길 의원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공무원보다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나라들 외에 다른 EU 국가들은 거의 무제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일본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권영길 의원 기억이 안 나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일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국제적 기준입니다.

총리,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국제 기준에 맞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현재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대학 교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인정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 교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길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아주 오래 한 나라하고 근대 국가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나라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 민주주의를 오래 한 국가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자, 대통령도 정부도 국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요즘 들어서 부쩍 국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국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국가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인격의 집적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착하고 약속 잘 지키고 바른말 하고 아름다운 말 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또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것도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집적이 국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노엄(norm)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지키는 것이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왜 그것을 빨리 안 하냐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길 의원 제가 이야기한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는 것, 국제적 기준 지키는 것, 그게 국격을 바로 세우는 거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구체적으로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게 국제적 기준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권영길 의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격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궁극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딱 단기에 해서 빨리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준비가 덜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길 의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어요. 더 이상 목숨을 빼앗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무얼 자랑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경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경제 발전 속에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자랑거리를 팽개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역시 정치도 그 민주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 의원님이 그리시는 이상형으로 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길 의원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선거 때 교사와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표를 할당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은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때 교직에 계셨지요? 서울대학교에 계셨지요?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 정운찬 예, 80년대에……

○권영길 의원 그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을 강제 홍보에 동원했다가 큰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들었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단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기 때문에 교육은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항의하고 한 것 아시나요, 모르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권영길 의원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공무원 동원하는 것, 공무원의 정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공무원을 거기에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들한테 그

실상을 가르쳐 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 바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정운찬 총리는 총리 이전에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립 서울대학교 교수와 총장직을 지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국가공무원인 교수, 총장은 이명박 정부 지지해도 문제가 없지만 일반 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에 대해 드러 내놓고 지지조차 못 하는 것, 이것 불공평한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직 지적·정서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 참여가 학생들의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허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고려 중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께서 오늘 수없이 '아직 우리는 성숙 단계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더 발전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더 피를 흘려야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고, 얼마만큼 더 피를 흘려야 국제적 기준에 맞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이것은 뭐 피 흘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 아니,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이 안 되었다며?

○국무총리 정운찬 꼭 피를 흘려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이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나서서 하면 정부가 탄압하고 구속하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바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동당과 전교조·공무원노조를 표적수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민주노동당 투표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총리, 민주주의의 동력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예, 어떤 정당이든 또는 국가의 어떤 투표든 간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이게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게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의 창당 이후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당원이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방의원들 후보에 대해서 또 당 대표를 비롯해서 중앙위원, 대의원들 또 지역에 있는 분회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인터넷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당의 선진화로 자라 나갔고 다른 정당도 지금 이것을 배우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함을 가져가서 이 무기명투표 한 것, 비밀투표 한 것, 이것 열어 보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등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권영길 의원 자세한 보고를 못 받았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아니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동력이지요? 예?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의 10만이 넘는 당원들이 10년 동안 모든 공직자 후보, 모든 당직 후보에 대해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했고 다룬 모든 사항 있는데 그것 가져가겠다는 것은 정당정치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공무원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권영길 의원 그래서 제가 요청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발부된 KT에 대한 검증영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서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압수 수색 검증 중 어떤 행위를 허용하는 영장인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영장이 어느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발부된 것인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권영길 의원 이것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으면 법무부장관께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셔서 총리님께 요청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총리께서는 국가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국가의 기본이요?

○권영길 의원 예, 국가가 해야 될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 저는 국가의 기본은 세금을 제대로 거두고, 거둔 세금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 그럴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예,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시지요.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정부다, 동의하시나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윤성 부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권영길 의원 예, 자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구간별로 보면 연봉 5억 원이 넘는 부자의 세금은 221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연봉 1000만 원 이하의 서민의 세금은 2317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이러면 장관께서는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더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세액이 아닌 감세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차트 1을 봐 주시지요.

연봉 1000만 원 이하의 감세율은 0.02%입니다. 그런데 연봉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감세율은 2%에 달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소득이 많을수록 감세율이 높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 해에 법정 세율 감소, 즉 부자감세로 온 나라와 국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도 정부는 부자들의 실효세율을 집중적으로 줄였습니다.

차트 세 번째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이 5억 원을 넘는 부자는 318만 원을 줄여 주었는데 서민은 단 9344원 줄였습니다.

네 번째 차트로 넘어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부동산세는 집 부자, 땅 부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데 100억 원 이상 집 부자들은 2008년에 1인당 1억 4000만 원 세금 덜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권 의원님께서 제시한 저 자료가 몇 년도 것 소득을, 몇 년도 것을 얘기 하……

제가 보기에는 2008년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영길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2008년 것이 맞지요?

○권영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들어서면서 감세는 2008년에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9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금 권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저 세금감소 자료는 2008년에는 실질적으로 감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2009년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이것은 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하고 지가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좌관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2008년도 자료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감세는, 일반적으로 감세 정책은 세계 경제 위기 발생한 이후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가면서 재정 지출 확대로 갈 것이냐 감세 정책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다 할 것이냐, 이러한 논란 중에서 각각 비교효과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에 세계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감세 정책은 소득세, 법인세 내리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또 2008년도 저 자료

는 갑자기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위기가 생기니까 그 영향이 와서 소득이 감소하고 지가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한 자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길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조사한 게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중에 그것을 실무자하고 비교……

○권영길 의원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고소득, 부자, 대기업에 감세해 준 액수가 3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무료급식, 무상교육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이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시지요.

교과부장관 나오셨나요?

지난달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록금 상한제 통과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의원 2000년 창당 때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를 당의 브랜드로 내걸고 의료비, 주택비 걱정 없는 사회를 외쳐 온 본 의원의 입장에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두 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 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권영길 의원 등록금 상한제가 규정된 고등교육법,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부령, 언제쯤 나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지금……

○권영길 의원 등록금 상한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게 바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등록금 상한제의 핵심은 대학교육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의원 또 10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이 부분,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의원 이것 언제쯤 해 주실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본 계획은 곧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10개년 계획 자체는 금년 하반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물가인상률 플러스……

○권영길 의원 올린 대학이 있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렇게 많이 올린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과부에서 각 대학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항목에서 등록금 인상률, 이것이 지나친 경우에는 그것을 좀 가중되게 만들어서 손해를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잘 알고 계시지요? 서민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느냐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권영길 의원 복리의 문제 또 군복무 기간에 이자 가산하는 문제, 그런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의원 여기에 대한 시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시정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복리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거치기간 동안 복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리고 진짜 상환할 때부터 복리가 되는데 보통 일반 은행에서의 대출의 경우는 거치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복리입

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사실은 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다 단리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가져오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커 가지고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길 의원 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가 잘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고맙습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원공단은 우리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창원공단은 우리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울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기계부품 소재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창원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던 한 대기업의 연구기관이 창원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입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기업이요?

○권영길 의원 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

○권영길 의원 파악해 주십시오.

또 다른 연구기관들도 창원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공장 하나도 떠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마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나 또 다른 기업들하고 관계가 긴밀해서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이고 세종시가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창원공단에 대한 특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오늘 MBC의 엄기영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축출 당한 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MB정부가 MBC를 이렇게 장악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데 아직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권영길 의원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권영길 의원 보고받아서 방문진이 MBC 사장 역할을 해도 되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MB정부가 MBC를,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요즘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국가가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국가가 서민에게 해 준 것이 뭐 있냐? 부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 비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래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출신 조진래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상당히 피곤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세종시 발

전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그 원안을 폐기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드시 이런 발전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총리, 이렇게까지 발전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세종시 수정안은 오로지 백년대계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이익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있습니다.

온갖 정치적 불리함을 알면서도 국가 미래를 위해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는 충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래 의원 그렇습니다. 무릇 위정자, 지도자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려움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패는 말할 수 없습니다.

총리, 아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총리한테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동의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조진래 의원 먼저 수도 분할의 다른 이름, 위장된 수도 이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안의 문제점은 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스몰 사이즈(small size)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비효율적 요소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에 예상되는 행정비효율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매년 3조~5조 원, 향후 20년간 최소 100조 원 이상의 비효율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출장비용, 수도권 시민의 증가된 방문 비용과 충청권, 영·호남권 등 시민의 감소된 방문 비용 등을 감안한 협의의 행정 비효율은 1270억 원이고,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위기관리 비용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광의의 국정 비효율 비용은 4.6조 원인데 대개 매년 3조~5조 원씩 비용이 발생하고, 통일 시 중앙부처 재이전 비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또 8조~17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물론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이런 비효율은 예정되었던 것이고 또 지금 총리께서 말하는 그 수치 자체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비효율을 감내하면서까지 부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국가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조진래 의원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세종시 설계를 총지휘했던 서울대 모 교수까지도 원안의 문제점과 수정안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지요? 그 내용은 내가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진래 의원 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역시 부처 분할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진래 의원 제가 역시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알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그리고 원안 통과 당시에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일하게 의원직을 사퇴했던 박세일 교수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원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까지 말한 바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근에 어떤 일간신문에 아주 크게 인터뷰가 났었습니다.

○조진래 의원 원안의 두 번째 문제는 수도권 과밀 해소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 그것 인정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인정합니다.

○조진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분들은 원안대로 부처가 이전할 경우에 많은 대기업이 내려갈 것이고, 또 그래서 수도권

과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정부 부처가 내려올 경우에 기업 활동의 제약 등을 이유로 오히려 기업들이 부담스럽다는 답변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다는 얘기를 그냥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도시 발전의 중핵, 즉 코어가 될 수 없으며 자족 기능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행정기관은 주변 도시 및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고, 또 청사 이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시 속의 외딴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진래 의원 세 번째 문제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원안에 따르면 자족용지는 한 6.7% 됩니다. 총리, 이런 자족용지로서 어떻게 인구 50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6.7%의 자족 기능 토지를 갖고서는…… 일자리가 한 8만 개, 총인구가 대개 17만 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마저도 구체적 유치 계획이나 인센티브가 없어 실제로는 인구 10만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진래 의원 더구나 지금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저하되고 있고 출산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옛날 고도 성장기와 같이 행정 기능만 가지고는 인구 유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조진래 의원 더군다나 일자리 없이 좋은 주거환경의 아파트만 공급하는 원안은 인근에 있는 대전, 공주, 조치원, 청주 등의 인구를 결국은 세종시가 흡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도시들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사실 정부에서도 원안대로 할 경우 세종시는 일자리가 부족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 주변 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전 청사가 이전한 대전 둔산동 신시가지는 공무원 가족들의 이전 등으로 우수한 주거단지가 형성됐지만 이로 인해서 대전의 중구, 그리고 동구 등 구시가지가 쇠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진래 의원 결국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도 분할의 다른 이름 혹은 또 위장된 수도 이전안이라 할 수 있는 원안은 결국은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고 또 개악이라 할 수 있고 오히려 발전방안이 차선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가 만든 수정안은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실제로 원안에 비해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효과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진래 의원 사실 참여정부의 수도이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있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국민투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게 충청표를 먹잇감으로 하는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충청 표를 의식해서 세종시 원안이라는 것으로 덥석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원안은 사실상 수도 분할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볼 때는 위장된 수도이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법 원안이 통과된 후에 노 전 대통령과 친노 측 인사들의 어록을 살펴보면 세종시 원안은 수도이전을 위한 징검다리, 즉 고도의 전술적 접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과 충청인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과 충청인은 오직 정치게임 속에서 놀이패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는 발전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방안 자족기능 제고를 통해서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금년 다보스포럼 10대 키워드로서 휴먼 리세션이 언급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은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정부도 최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택했고,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많이……

○조진래 의원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의 경

우에 수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단기적인 정책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역시 녹색성장동력을 확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세제적·행정적 그런 제도도 많이 마련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흔히 그래서 실업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2차대전 때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에서 보듯이 일본은 그 폐허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그런 자양분을 토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장기 고착화는 그것이 포퓰리즘과 결합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그 기반 자체를 붕괴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실업 특히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서 우리 발전방안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결국은 자족기능을 제고해서 그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총리 일자리 창출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신설도시의 인구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의 관건은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 등 입주기관들이 창출하는 고용입니다. 그래서 50만 인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9만 명의 자족 고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족 용지가 6.7%에 불과했던 원안에 비해서 수정안은 자족 용지를 20.7%로 늘렸고, 원안에는 없었던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유치된 자족기능만 해도 약 300만 평 정도 돼서 원안 자족기능용지의 2배에 이르고, 유치될 예상 고용은 한 24만 명으로 원안의 3배가 된다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진래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자리 창출효과 그리고 전후방 연계효과 이런 것은 보지 않고 재벌 특혜 주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 정부의 편 가르기의 연장에 불과한 선동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총리 동의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발전안에 대기업 특혜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총리, 그리고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바람직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총리 어떤 방안이 담겨져 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선도기업과 우수대학을 유치해서 세종시를 첨단과학도시로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대덕에 부족한 기업과 대학을 보완하고, 또 인근의 오송에 대해서는 기초연구기능을 보완해서 연구·기술·초기상품화의 삼각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세종시는 세계적인 원천기술 산실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은 충청뿐만이 아니라 영·호남 그리고 강원까지 그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진래 의원 발전방안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세종시 자족기능 보강 방안이 대구·경북 유치 희망산업과 중복되어 대구·경북의 피해가 크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세종시와 중복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한다는 이유로 타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믿어 주십시오.

세종시 발전안이 타 지역에 피해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 지방에 입주 예정인 것은 애초부터 제외하였습니다. 신규사업만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지역, 산업토지 110만 평 중 이미 96만 평이 입주가 확정되어서 세종시에 더 유치할 땅도 없고 더 이상의 기업유치 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진래 의원 총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함안·의령 지역은 홍수예방 차원에서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조진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9년 예결위 때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그때 장관께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조진래 의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한 2.5m를 낮추어서 주변지역의 지하수위 영향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한 14㎢에서 0.7㎢로 지하수위 영향지역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농경지 성토라든가 배수시설 확충 대책을 해서 정말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문제는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역민의 불만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주민설명회에서 대책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지역에서는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대책을 수립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비공개 마스터플랜에는 침수지역이 더 많았는데 국토부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조진래 의원 그러니까 이처럼 장관께서 약속하신 그런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설명을 원하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걱정한 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정밀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2월 중에 주민들께 이 조사—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장관, 제가 보기에는 장관께서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나 다 명쾌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산하단체 직원들은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산하단체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바르게 설명할 것을 약속할 수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제대로 독려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장관께서 최근에 함안보 또 합천보 현장을 시찰하고 왔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토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0.7㎢에 대해서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 해당 경작자에게는 적어도 최소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그리고 장관, 최근에 달성보와 함안보 준설작업 중에 오염퇴적층으로 보이는 검은 퇴적토가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검은색 흙이 나와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진래 의원 그 중에 우리 함안보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센터 또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국립환경과학원 등 3개 기관에서 오염도를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금속 전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진래 의원 그건 우리나라 기준이죠?

좀 이따가 나오는데 미국 기준은 또 좀 다르

죠, 그렇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미국 기준은 해양청에서 얘기한 건데 그건 미국 내에서도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의원님.

○조진래 의원 좋습니다.

그럼 달성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달성보도 마찬가지로 3개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역시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진래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당 의원들이 채취한 퇴적토에서는 비소가 미국 기준을 초과했고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수은이 또 미국 기준을 이렇게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는 그런 보도는 들어서 알고 있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미국 기준이 아니라 대기해양청에서 발표한 그런 기준보다 다소 초과는 했는데 제가 전문가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건 미국 내에서도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진래 의원 아, 물론 미국해양대기관리청 기준이 퇴적물 중에서 유해물질 농도의 수생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준설물질의 처분기준이나 또 퇴적물 등에 대한 규제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야당하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미국 기준을 초과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질오염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 식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염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토양정화대책이라든지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수립 또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철저히 수행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장관, 지난 예결위 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하천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그 지역의 일부 농민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공사로 인해서 그 허가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하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득권자한테만 신규허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진래 의원 이러한 보상기준 때문에 결국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지 못한 이들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지금 국민권익위에 제기돼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감사합니다.

○조진래 의원 다음 총리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국무총리 정운찬 괜찮습니다.

○조진래 의원 갈수록 질문내용이 충실해지고 또 답변태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조진래 의원 현재 아이티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진래 의원 우리나라도 119구조대 파견해서 아이티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티가 식량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태국의 경우에는 아이티에 쌀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그리고 작년 2009년 연속적인 대풍으로 인해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매입한 시장격리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지금 90만t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조진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더 발전적임이 확실하고 또 국민 전체로 볼 때 발전방안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번복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것을 끌어안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마도 법안과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과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불일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18대 국회 등원 시에 헌법에 의거해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서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선서를 되새긴다면 분명히 세종시에 대한 해답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족한 이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조진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성린 의원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 2년간의 경제성과를 두고 여야 간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으며 나라가 거덜 난 것처럼 주장합니다. 반면에 세계은행, IMF, 선진국의 주요 경제지들은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지금 정부가 미증유의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출범했다는 사실이 때때로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보다는 기대하는 경제상황의 호전 쪽에만 맞추는, 우리 쪽 시계열에만 맞추는 그런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정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평가를 좀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증세, 규제강화에 기반한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을 감세, 규제완화의 친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는 친서민 중도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1에서 보시다시피 세계경제 역사상 미증유의 경제위기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저기 경제성장률이 나오는데 우리 경쟁 대상국이나 OECD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2에서 보듯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정책을 감안한 가처분소득을 볼 때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감소했습니다. 저게 이제 작년에는 아직까지 가계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계수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과도 좋고 소득분배 개선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초기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적시에 또 조기에 잘 집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경제적 취

약층을 위해서 친서민정책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지금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참으신 국민 또 협조해 주신 국회와 경제주체 모두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들어가시고, 금융위원장 잠깐 나와 주세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속히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아직 세계 경제는 불안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릴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견고한 회복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장께 위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동구권 금융경색 또 두바이월드 파산 사태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지만 지난 주말 우려하던 일부 유럽국가들, 피그스(PIGS)라 그러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나성린 의원 국가들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인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서서 오전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금융회사의 대그리스나 다른 4개국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리스는 한 3억 80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남유럽 4개국, 아일랜드 빼고서 하면 한 6억 불 되고요, 아일랜드를 포함하면 한 24억 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지난 주말에 주가가 폭락했단 말이지요, 50% 이상.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외국 투자가들이 돈을 빼내갔기 때문인데 유럽 투자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빼내갔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최근에 그렇게 특징적으로 보일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유출은 아직 없었습니다.

○나성린 의원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빼내가지 않았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유지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리스 사태가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국가부도 사태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일반적으로 아마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에 대한 핵심 채권국이 유럽에서도 주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렇게 아주 갑작스런 어떤 채권 회수가 없는 한 그런 국가부도 사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번 유럽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관련 조기경보 지표 같은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저희가 2008년 하반기 이후로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 간에 모여 가지고 각별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국내유동성 위험도라든지 또는 해외유동성 위험도 같은 것을 죽 관찰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전반적으로.

○나성린 의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위험도는 없었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특징적인 현상은 최근에 와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 하는 것은 특징적인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위험하다 하는 정도의 그런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조금 전에 그래프가 지나갔는데 개인적으로 위험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특징적으로 위험도는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 발생 후에 이런 위험도가 좀더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무래도 변동성이 당분간 이 부분에, 남유럽 사태 부분이 저희들은 뭐 어차피 유로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다소 변동성이 아마 커지리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전반적으로는 이번 유럽 사태가 세계 금융위기나 또 우리 국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기획재정부장관, 이리 나와 주시지요.

이번에 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과도한 재정적자가 또 다른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도 재정적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재정적자도 그러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스와 같이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상당히 자신감 있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예, 그 이유를 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그리스는 작년도 재정적자가 GDP에 대비해서 12%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5%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7%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우리가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게 된 것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밑받침되었다고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많은 분들이 우리 재정이 거덜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재정수지로 해도 작년에 －5%,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내년에 2.7%로 내려갈 것으로 ……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관리대상수지로 해서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더 낮고요, 그렇지요? 관리대상수지는 훨씬 낮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도 그리스처럼 그렇게 재정적자로 인해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우려하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국채 발행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국채 발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채 발행 여건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우리 국채 발행 여건도 참 양호합니다. 예를 들면 국고채 발행이 시장에 주는 부담을 보면 우선 국고채 5년물 금리 중심으로 보아도 금리가 지금 4.8% 정도에서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고채를 응찰했던 응찰률 상승률이 대단히 높이 올라옵니다. 작년도에 2009년 하반기에 220 정도였던 것이 이번에 1월 달에 무려 응찰률이 29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융시장에 국채를 수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국고채를 한 85조 정도 발행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적자 규모를 줄임으로 인해서 한 8조가 준 77조 정도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국채를 소화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소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ICL 또는 수자원공사 등에 대해서 국가보증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공사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잘 발행이 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발행 상황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아마 금년에 ICL 채권이 아마 한 8조~9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할 수 있는 공채 또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까지 다 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채권시장에서 수용 능력은 원만히 소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에 필요한, 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채권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유럽 사태 직전에 5년 만기 국채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25bp 급등했는데 왜 그랬지요, 그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최근에 우리가 한 이십몇bp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은 우리나라

만이 아니고 미국도 20bp CDS가 상승을 했고요.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CDS 프리미엄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양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의 반등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의 대외신인도는 탄탄합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미국 금융규제가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중국이 긴축정책을 발표했지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요소들은 이미 다 CDS 금리 급등에 다 반영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알겠습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일단 생략하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서 기재부장관이나 금융위원장께서 우리 경제를 더블딥으로 몰고 갈 그런 침체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경제위기가 회복세에 있는데 이 회복세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 10을 좀 띄워 주세요.

작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은 기업의 수출 확대와 또 정부 재정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따라서 현재의 경제 회복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 투자의 확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회복은 주로 재정 지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자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지요, 그것이 늘어나야지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겠지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자료 11을 좀 띄워 주시면 건설 투자는 회복 추이에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2년간. 그런데 기업의 설비 투자는 지난 2년 내내 부진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무엇보다도 지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확신들이 조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분위기 자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저희 국내 요인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상대적인 고임금 문제랄지 또 후진적인 노사관계 문제랄지 또 규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신성장 동력 산업을 규정해서 나름대로 육성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다행히 아까 자료 11에서도 기업 투자가 올해는 조금, 설비도 증가할 전망인데 자료 12를 띄워 주시면 개별 기업 발표에서도 올해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일단 기업들은 금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재고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성린 의원 그러면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투자가 금년에는 늘어날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확실하게 우리 성장세를 본격적인, 자력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견조한 투자 증가가 필요합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국내 기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국으로 나간 우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턴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저희들도 그래서 특히 중국 쪽에서 유턴 기업 문제가 있어서 현지 조사도 해 보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여러 가지 청산을 함에 있어서 야반도주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중국이나 외국에서 유턴해서 들어온 기업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이것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어떤 게 있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우선 임대산업용지 분양 시에 유턴 기업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일본이 말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유턴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데 상당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기업들이 수도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많이 해 줬어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수도권 이전할 경우에도, 지금 지방에 대해서만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을 하게 되면 또 수도권 과밀화 또 국토 균형발전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방에 대해서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국내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 FDI지요. 자료 13을 보시면 증가가 필요한데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행히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FDI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어떤 방안 같은 것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FDI가 우리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대체로 우리가 외투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이 한 20%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 여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다, 또 여기 투자하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외국인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투자 유입국도 지금까지는 선진국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국이나 이런, 또 다변화하는 이런 노력도 하고 또 저희들이 신성장동력 분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녹색,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나 이런 쪽에도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일자리 없는 성장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정부도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뿐 아니라 고용증대에 두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에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했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나성린 의원 특별한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 자리에서 다양한, 어떠한 1차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이나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고용안정프로그램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해서 여러 가지 세제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당초에 한 5%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한 20만 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한 5만 개 이상을 좀 더 늘리자 이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자료화면 14를 좀 띄워 주세요.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공공부문에선 어느 정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요. 상당히 마이너스인데 민간부문, 특히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참 중소기업에서 고용 흡수를 많이 해 줘야 우리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중소기업에는 지금 인력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교육제도가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전부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서는 잘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나 작업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열악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느니 차라리 실직자로 놀겠다 하는 이런 젊은 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성린 의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것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구직난에 미스매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것을 제안했어요.

중소기업 경력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대기업 경우는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기업 경우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지원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러한 어떤 단기적이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 대기업도 채용 패턴을 보면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패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조금 더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런 제도 도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쓸 만한 인력을 대기업에서 빼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인재 유출의 문제도……

○나성린 의원 저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일부 빼 나가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안 할 때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중에서 일부 또 우수한 사람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만 우수한 사람이 나가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고 말이에요.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봐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저희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더 그걸 정교하게 다듬어 보고, 예컨대 공기업 부분부터 먼저 한번……

○나성린 의원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렇게 적용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세종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논쟁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논쟁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수도 분할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종시의 경제적 효과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야당은 수도 분할을 이유로 첫째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의 조화로운 발전을 원하고 있지요.

총리도 원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당연합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원안은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돈으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인구분산효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9부 2처 2청이 이전할 경우 공무원과 그 가족이 모두 내려간다고 하면 몇 명 정도 내려가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9부 2처 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내려가면 한 1만여 명 정도 되고 가족이 2명 또는 3명이라고 하면 다 합해서 최대 2만 5000 내지 3만 명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뭐 한 3, 4만 명. 2만 5000 내지 3, 4만 명 이렇게……

○국무총리 정운찬 2만 5000 내지 3만 명, 100% 간다고 그러면요.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 2030년까지 50만 명 인구 도시를 만든다는데 이래 가지고 과연 이 50만 명 인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이 원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구는 한 17만 명 정도인데 그것도 전혀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는 한 10만 정도 될까, 적어도 그 이상은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5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천문학적인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도시특별법 51조에 의하면 재정은 8.5조 이상 더 투입 못하게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만 명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50만 명이 가더라도 과연 수도권에서 그 50만 명이 다 내려갈 것인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원안대로 하면 세종시는 중앙행정부처하고 아파트하고가 큰 쌍벽을 이룰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인근의 대덕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공주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말씀드린 그 인근 지역은 공동화가 일어나고 단기간에 세종시는 그냥 쾌적한 아파트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50만 명이 내려가지도 못하겠지만 한 삼사십만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도권보다는 그 인근의 도시에서 많이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땅한 기업이나 대학들이 없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성린 의원 그래서 수도권 1500만～2000만 명 인구 중에서 몇십만 명 내려간다고 해서 인구분산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몇십만 명이 내려간다면 그것도 조금은……

○나성린 의원 한 1500만～2000만 중에서 몇십만이 내려가서 인구분산이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50만 명이 간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큰 분산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보겠는데 지난 20년간 수도권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수도권 규제의 최대 수혜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의원 충청남북도가 최대 수혜지역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충청도가 지금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성린 의원 1인당 소득도 아주 높습니다, 거기가.

○국무총리 정운찬 울산에 비해서 충남이 2등이고 아마 성장속도는 거의 1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충청권을 세종시에 22조 원 이상, 민간투자를 포함하면 46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쏟아 붓게 되면 오히려 호남이나 영남, 강원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는 돈이 덜 가지 않습

니까? 그리고 발전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우선 46조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것은 민간투자까지 합해서 그런 거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아주 오래오래 두고 민간투자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성린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같은 22조 원의 돈을 들여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역 경제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지금 5+2 같은.

그리고 그 클러스터에 맞는 최고의 대학 또 일류 학교들, 관련 연구소, 공공기관들, 대기업 및 하청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종시에 갈 22조 원을 이렇게 각 지역에 나눠 주면 그것이 훨씬 더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두 가지를 제가 비교하는 것이지요—실질적인 대량 인구분산에 도움이 된다 이거지요.

지금 세종시만 하면 거기에 이삼십만 내려갈지 어떨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광역 경제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일류 학교도 만들고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안 올라옵니다. 그 지역에 머물게 되고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대량 인구분산이 되는 것이지요, 대량 인구분산. 몇십만 인구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역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발전의 결과로 국토가 조화로운 발전을 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완전히 국가 균형발전만을 위해서라면 그나마 형편이 나은 충청권보다는 영·호남이나 강원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개 지역에 골고루 나눠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토지수용이 끝났고 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파헤쳐진 세종시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국가 미래에 대비하고 균형발전 효과가 더 큰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역 균형발전보다는 지역발전 균형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며칠 동안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결국은 뭐냐 하면 세종시를 좋은 도시로 만들자, 그리고 과학이고 경제가 잘된 도시다, 그리고 그 인근의 오송이나 오창, 대덕, 대전이 발전한다,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가게 돼서 그 이북은 모르지만 이남, 영남권·호남권에 파급효과가 과학이나 경제적으로 가면 결국 이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보다 더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나성린 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야당의 비난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2년 동안 미증유의 세계적 경제위기하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빨랐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고 데이

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빈곤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청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하며 동시에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기업투자의 활성화입니다. 따라서 올해 1년 동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 주신 선배 의원,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등원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초짜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삽질 정책이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부실한 4대강 사업과 행복도시 백지화에 대하여 국민 마음을 대신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최근에 4대강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가 봤습니다.

○김진애 의원 언제 가 보셨지요? 어디 가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죽산보도 가 보고 금강보에도 가 봤습니다.

○김진애 의원 가장 최근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날짜를 잊어 버렸습니다. 죽산에 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애 의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1월 20일 대구의 혁신도시, 당시에 여러 가지…… 세종시 대안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민심이 흔들리자 대구의 혁신도시 갔다가 달성보 들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거기도 갔었습니다.

○김진애 의원 달성보인지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애 의원 달성보에서 무슨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공사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물막이도 봤고 또 기초터파기도 봤고 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 안에서 오염된 오니토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보고는 거기서는 못 받았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러면 현장에 가셨다고 하는데, 현장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달성보 현장입니다.

달성보 현장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꺼먼 오니토 나온 거 전혀 모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육안으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김진애 의원 지금 이런 오니토가 달성보 뿐만이 아니라 어디어디서 또 발견이 되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왜 현장에서 총리께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니토 보고를 안 했습니까?

총리가 가기 열흘 전에 벌써 환경단체들이 오니토 발견되었다고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현장에서 오니토에 대해서 시료 채취했습니다. 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환경단체 못 들어오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속으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오니토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도를. 그런데 그 조사가 진행 중이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결과가 다 나오면 총리한테 보고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니토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총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낙동강이 1300만의 식수원입니다.

만약 오염이 됐다면, 그리고 특히 지금 비소나 수은 같은 게 나왔는데 만약 오염이 됐다면 당장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이것을 지시해야 되는 게 총리의 역할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는 했습

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김진애 의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국토부장관이 얘기했듯이 그거 뭐 미국 대기환경청에서 얘기한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오니층이 달성보 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가물막이 공사라 이렇게 눈에 보이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준설공사 시작되고 나면 이제 포크레인으로 물 속 막 헤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토라는 것은, 지금 표피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그 밑에 얼마나 깊이 얼마나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건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낙동강에서 발견된 오니토는 국내외 토양오염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식수 등의 오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라고 당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애 의원 아니, 당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사는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겠다고 그러고 앞으로 오니층을 어떻게 발견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물 속에서 보이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하자가 발견되면 저희가 무리한 공사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의원 하자가 발견되기 전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총리의 역할이시지요.

총리의 역할이 어떤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진애 의원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러면 최근에, 함안보 아십니까? 함안보가 원래 관리 수위가 7.5m였는데 2.5m 낮춘 거 보고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진애 의원 왜 그런 일이 생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애 의원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거는 침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만든 4대강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지금 침수 가능성이 있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넓어서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함안보 인근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의 높이를 낮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함안보에서 이렇게 주변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침수면적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함안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보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시하겠습니다. 있으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있으면'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이미 마스터플랜에 지도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모든 보 근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 지금 의원이, 제가 요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알기로는 다 투명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투명치 않게 한 것은 투명하게 하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함안보 가서 침수피해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리고 농경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주민들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못 만났습니다.

○김진애 의원 세종시, 행복도시 때문에는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해양부장관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겠습니까?

○김진애 의원 국토해양부장관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 하듯이 모든 문제를 다 깔아뭉갭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불도저처럼 미는 것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국토부장관을 믿고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이런 주민피해 같은 것은…… 적어도 총리께서 어떤 민원이 있는 것이냐, 이것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체크해야 하는 게 총리의 역할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앞으로 체크하겠습니다만 저는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김진애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수에 대한 것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보도자료를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나오셨을 겁니다.

4대강의 핵심사업은 15개 보지요. 그리고 그것은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참 잘돼야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애 의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다 부실설계한 것 때문에 붕괴사고 생겼지요? 그런 사고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애 의원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기본 실시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설계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신 수리모형실험을 통해서 또 재검증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 실시설계가 언제 나오게 돼 있습니까? 15개, 수공에서 턴키 발주한 턴키공사의 실시설계가 언제 나오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3월에 나오는 것도 있고 좀더 늦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애 의원 그중에 한 3분의 2는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작년 9월에 4대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 수리모형실험을 해 가지고 홍수와 오염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모형실험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몇 퍼센트 돼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월까지는 수리모형실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의원 2월 말에 턴키 실시설계는 확정이 되고 그리고 수리모형실험 결과는 3월에 나오면, 그러면 실시설계에서는 홍수에 대한 예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구조에 대한 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오염에 대한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실시설계입니까? 그게 부실설계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러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등 각 단계에 대해서도 보에 대한 안전 검증을 했지만 수리모형실험……

○김진애 의원 안전 검증을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보 설계 과정 중에서만 유일하게 안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구조물에 대한 것은.

그런데 지금 구조물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보 공사, 기초공사 같은 것 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현재 보 공사는 가물막이라든지 기초터파기 등 실험과는 무관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3월까지 실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본공사를 시행할 텐데, 단지 수리모형실험 결과는 필요하다면 결과를 공개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시면, 총리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제대로 수리모형실험 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보 공사는 가물막이라든지 기초터파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애 의원 아니,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본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설계에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또 적법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국토부장관은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총리의 지침입니다. 정확하게 수리모형실험 끝내고 그리고 실시설계 해서, 제대로 해서 붕괴위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총리, 물에서 붕괴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홍수가 나서 붕괴되면, 그런 사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물에서 붕괴라는 것은……

○김진애 의원 강에서 홍수가 나서 댐이나 어떤 구조물들이 붕괴된 것 그런 사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못 들어 봤습니다.

○김진애 의원 한탄강의 연천댐, 두 번 붕괴했는데 그것 모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이 90년대 일어난 일입니까?

○김진애 의원 96년과 99년 두 번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리고 2000년에, 바로 다음해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지금 보이시는 저겁니다. 양쪽에서 두 번, 한 번은 오른쪽에서 한 번은 왼쪽에서 붕괴돼서 그 다음해에는 완전히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맡은 데가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4대강에 설치하는 보하고 굉장히 유사한 종류의 보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현대건설에서 사업자로 한 것입니다.

이것 수력발전소 만든다고 하면서 만든 것인데, 당시의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언제 공사……

○김진애 의원 83년입니다. 83년에 시작을 했을 때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정운찬 이명박……

○김진애 의원 이명박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각서까지 쓰셨습니다. 홍수피해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각서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96년, 99년 두 번 홍수 나고 그리고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은 10년 동안 민사소송 해서 2008년이 되어서야 겨우 일부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99년 사고는 올가라는 태풍이 올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야말로 최대 800㎜ 이상의 기록적인 강우가 있었다고 들었고 또 연천 소수력댐은 홍수조절 능력이 거의 없는 소수력발전용 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은 것은 그 당시하고 지금은, 우선 그것은 댐이고 지금은 보 공사이고 또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애 의원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처음에 발표했을 때 보 높이가 1m, 2m에 불과했습니다. 1년 전에 총리실에서 4대강 보 높이는, 이게 대운하가 되려고 하면 수심이 6.1m 되고 보가 10m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심 깊이가 1.1m 그리고 보 높이가 11m에서 13m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데도 이게 대운하 사업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대운하가 되려면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를 가 보나 또 어디 가 보나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이 있어야 되고 또 터미널 등의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런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지요.

총리, 이명박 대통령 하면 대운하 사업을 제일 많이 떠올리지요. 후보시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세금 한 푼도 안 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 반대가 거세지자 대운하 안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지나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안 지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혈세 14조, 다시 22조로 늘었습니다. 보는 4개였다가 16개가 됐습니다. 수심이 평균 2m였다가 이제 7.4m입니다. 보 높이가 2m였다가 이제 11.2m입니다.

대운하는 아니지만 분명히 대운하 준비사업 그리고 운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식수난, 홍수난, 침수난 이런 것을 걱정하게 됐으면 정운찬 총리의 표현을 빌자면 이것 완전히 엉터리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엉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께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국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총리의 기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관계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대운하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진애 의원 다만 대운하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 행복도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저는 3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전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아마 이 국회에서 임시행정수도와 행복도시에 동시에 일을 한 사람은 저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그 행정도시 건설이 여야를 떠나서…… 지금 잠깐 다른 게 나옵니다. 이 다음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은 여야를 떠나서 역대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적 가치였고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준비해 주시지요.

이게 아니고 보도 기사자료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잠깐 빼 주십시오.

이거 총리 같이 보시지요.

1971년 김대중 후보께서 대전으로 행정 부(副)수도를 정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7년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다음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대전 제2수도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11개 중앙행정기관을 옮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다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도시 수도분할로 볼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수도분할 아닙니다. '수도분할'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끊임없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는 충청도민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오해였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질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정말 모략이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애 의원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을 단 두 번의 사과, 그리고 20번을 약속한 것을 단 두 번의 사과로 한다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역대 지도자들이 선거과정이나 또는 안보상 이유 등으로 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나 행정기관의 분산 이전을 시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청 단위 기관을 대전에 옮긴 것 외에는 전혀 실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과천은 세종로 청사가 비좁고 인근에 땅을 구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전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수도 이전이나 행정기관 분산이 어렵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걸 자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나눠서 옮긴 사례는 지구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비록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보상의 이유로 임시수도를 대전 지역에 만들자고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읽어본 바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신임하시던 경제수석 오원철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만 그 인터뷰에 의하면 1977년에 계획했던 대전으로의 임시수도 계획에서 나온 안하고 우리 세종시 원안하고 비교해 보면 세종시 원안은 참 미미하기 짝이 없다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자, 지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지금 무슨 계획인지 아십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임시행정수도 계획입니다.

다음.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행복도시 원안 계획입니다.

자, 이것을 현 장면에 정확히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장기군, 연기군이 있는데 거기 금강변에 임시행정수도가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에 행복도시가 계획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오버랩(overlap)이 됩니다. 여기가 그만큼 명당이라는 얘기입니다. 30년을 뛰어넘어

서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공간에서 만난 겁니다.

총리,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누가 백지화시켰지요? 전두환 정권이지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정통성이 없으니까 감히 백년대계 못 했던 겁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 누가 백지화시킵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백지화시키려면 왜 당초 공약 안 했습니까? 왜 대통령 취임하고 이슈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기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기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왜 두 분 대통령 서거하고 한 달 지나자마자 백지화를 들고 나옵니까?

그 총대 누가 멨습니까? 정운찬 총리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그런 억측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를 영구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일되면 다시 서울로 환도하겠다는, 문자 그대로 임시행정수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목적은 균형발전보다는 안보상 이유가 컸음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임시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왜 취임 후 금방 세종시 원안을 고치지 않았느냐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지나자 세계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생각했었더라도 그것을 표출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2008년 7월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세종시 원안은 참 곤란하다 하는, 그것에서 고쳐야 되겠다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 1년 또는 그 이상 국토해양부하고 또 건설청인가 그 두 군데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상당한 궤도에 올랐을 때, 또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발표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우연의 일치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애 의원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30년 전에 실현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행복도시 실천만 하면 됩니다. 행복도시는 가치 있는 정치 논쟁을 거쳐 합의된 국가정책입니다. 행복도시 계획은 우리 도시사에서 가장 선진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행복도시를 폐기하려 합니다. 대통령이 앞서서 정략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대통령 편과 아닌 편을 나누며 권력 투쟁을 부추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 듭니다. 입주기업 유치를 둘러싸고 지방 혁신도시들 사이에 갈등을 만듭니다. 비수도권 지방들끼리 밥그릇 다툼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정략적 행보를 멈춰야 합니다. 국회가 견제해야 됩니다.

4대강이 대운하 준비사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속도전이 부실과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국민 70%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는 지난 연말 4대강 예산 강행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날 행복도시 백지화 사태라는 부메랑을 불러온 것 아닙니까?

이제 여야를 떠나서 진정으로 원칙과 신뢰를 존중하는 정치인으로 바로 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려면 부실한 4대강 사업과 정략적인 행복도시 백지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김진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 의원(27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82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순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김희철
나성린	박근혜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규백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제창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범관 이범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화수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장선 정진석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15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윤
김 정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오제세
우윤근 원희목 유성엽 유일호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성헌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전현희 정갑윤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경환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57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권영길
김금래 김상희 김성곤 김소남
김영록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혜성
김희철 나성린 문희상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박지원 배은희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안효대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윤상일
이강래 이용희 이주영 이진복
이해봉 장세환 정범구 정수성
정하균 정해걸 진수희 최경환
최연희 최영희 허원제 허 천
홍재형

○청가 의원(8인)

김 세 연　김 재 균　송 영 선　유 원 일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애 주　최 구 식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안 병 옥
의 사 국 장　이 종 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기획재정부장관　윤 증 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 태 평
지식경제부장관　최 경 환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특 임 장 관　주 호 영

○출석 정부위원

금 융 위 원 장　진 동 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2. 5 정부 제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강석호·안효대·이사철·강기갑·신성범·이한성·나성린·여상규·이용희·현경병·김성수·홍사덕·송광호·이낙연·박보환·원희목·김정훈·정미경·정해걸·유기준·이화수·김학용·김선동·현기환·조전혁·박순자·이주영·이정선·서상기·이명규·조진래·김옥이·이계진·김영록·유성엽·김우남·이은재·조배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윤상현·공성진·구상찬·김성태·박선영·박준선·신지호·유기준·이경재·이성헌·조진래 의원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홍희덕·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최문순·유원일·이찬열·김영진·김재윤·안홍준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5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의 공무원 국외여비 부적절 사용에 대한 감사청구안

(2010. 2. 5 박상돈·권선택·김낙성·김동철·김용구·김창수·류근찬·신건·신학용·박선숙·박선영·변웅전·유원일·이명수·이용희·이재선·이진삼·임영호·홍영표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최재성·강기정·이찬열·서종표·이종걸·김춘진·김진표·백원우·서갑원·김영진 의원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김성식·김정권·남경필·임영호·고승덕·김성태·황영철·박민식·신성범·권영진·주광덕·이한구·현기환·김효재·이정희·강봉균·배영식·윤석용·이종구·오제세·김재경·이혜훈·서병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김성식·김정권·남경필·임영호·고승덕·김성태·황영철·박민식·신성범·권영진·주광덕·이한구·현기환·김효재·이정희·강봉균·배영식·윤석용·이종구·오제세·김재경·이혜훈·서병수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김성식·김정권·남경필·임영호·고승덕·김성태·황영철·박민식·신성범·권영진·주광덕·이한구·현기환·김효재·이정희·강봉균·배영식·윤석용·이종구·오제세·김재경·이혜훈·서병수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강봉균·강성종·홍재형·박선숙·장세환·우제창·조배숙·임영호·변재일·최인기·김효석·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4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정태근·권경석·김소남·신지호·

안경률・원유철・이범래・이은재・장제원・주광덕・현기환・김선동・윤석용・권택기・정두언・남경필・백성운・신성범・권영진・이춘식・차명진・강성천・김금래・안효대・임동규・김성회・이정선・김무성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한선교・안홍준・이한성・이인기・김금래・박대해・안형환・허원제・강승규・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한선교・안홍준・이한성・이인기・김금래・이해봉・박대해・안형환・허원제・강승규 의원 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